

第303回國會
(定期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7號

國會事務處

2011年10月11日(火) 午前 10時

議事日程

- 1. 정치에 관한 질문

附議된案件

- 비교섭단체(자유선진당) 대표발언 1
- 1. 정치에 관한 질문 4

(10시04분 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한공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비교섭단체(자유선진당) 대표발언

○의장 박희태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선진당 대표이신 심대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大平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대표 심대평입니다.

최근 사회적 약자를 유린한 부패한 기득권층을 고발하는 영화가 상영되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아동 성폭력 문제를 다룬 영화 ‘도가니’가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능하고 정치가 무기력하니 고통받는 약자를 한 편의 영화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무친 분노를 소문이라도 들으신 겁니까?

“충격이다.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사건 발생 6년이 지나도록 누구도 말하지 않던 사건을 두고 영화 개봉 1주일 만에 강력한 채수사 지시와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외면한 국민의 아픔을 한 편의 영화가 달래주고 그 영화를 보고 나서야 정부가 호들갑을 떨어대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정부가 얼마나 무능했나, 얼마나 무감각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어디 영화뿐입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용암처럼 분출되면서 국민이 정치를 버리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공공의 적인 나라, 이런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절제의 브레이크가 고장 나고 탐욕에 눈먼 금융자본주의가 초래한 글로벌 경제위기는 국가마다 예외 없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의 건강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중산층과 서민들이 절망의 나락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상실한 그들은 이제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앵그리 시대, 분노의 시대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 확산되는 반금융 시위는 미국인들의 좌절감을 분노로 표출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저축은행 사태는 고리대금업자에게 ‘은행’이라는 이름을 달아 쥐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아 보려는 서민들을 유인당하게 하고 수수방관한 대

국민 사기극이 아닙니까?

문제의 핵심은 정부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부재와 유착에 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 해결에 대한 정부 대책은 군색하기만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저축은행을 상대로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것, 피해자의 소송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고작입니다.

불과 10만 원, 20만 원의 유리한 이자를 기대하고 예금을 한 은퇴자의 퇴직금이나 서민들의 원금마저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서민의 정부입니까? 서민의 생명 같은 저금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정당이 민생정당입니까? 서민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고 방치하는 정치권이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을 공범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정부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직무유기 및 유착을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특검을 포함,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재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자유선진당은 정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피해 서민들의 배상책임에 대한 집단소송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서민들의 피눈물은 저축은행뿐이 아닙니다. 평생 모은 보증금 이삼천만 원으로 마련한 공공임대주택에서 편안하게 살 줄 알았던 서민의 소박한 소망이 무참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부도 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날리고 거리로 쫓겨나 자살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상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은 방만하고 관리감독은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처벌규정이 만만하니 건축주가 고의로 부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정치와 정당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서민들이 어렵게 돈을 모아 장만한 집 한 칸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국 부도 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표들이 와 계십니다. 하루하루를 가슴 졸이며 살고 계신 저분들의 집을 지켜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유선진당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양국의 비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 상정에만 매달려 제대로 된 피해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 정부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장밋빛 미래와 같이 국민을 호도하는 일방적인 홍보가 아닙니다. 정부가 22조원의 재정을 마련했다지만 붕괴 위기에 직면한 농축산어민들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찍이 정부 발표 대책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직불금제도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로 일원화, 축산발전기금 적립금 상향, 농어민 복지지원대책 등 10조 원 규모의 10대 분야 추가대책을 이미 자유선진당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것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자유선진당이 제시한 추가대책이 먼저 해결된 후에 한미 FTA 비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는 냉철하면서도 따뜻하게 판단해야 할 국민의 권리이자 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이것을 정치 이슈로 끌고 가는 복지 논쟁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복지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사회적 통합과 합의가 존중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복지의 확대는 누구나 원하는 바입니다. 다만 시행된 복지정책은 감축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경제위기, 국가부도의 위기에서도 시위가 끊이지 않는 외국의 예가 타산지석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의 스승인 하버드대의 존 롤스 교수는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태를 ‘무지의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지의 장막 속에서 모든 선입관을 버리고 바라본다면 어디서부터 따뜻한 복지의 손길을 쥐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자유선진당은 국가 미래를 위한 효율적 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한 국민행복기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입니다. 여와 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세력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프리캐리어트(Precariat)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단기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이 불안정하고 삶이 고단한 서민들을

총체적으로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프리케리어트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노후 뒷받침이 없는 어르신들이 절망과 분노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일을 해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워킹푸어(working poor) 세대가 2010년 기준 30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까지 일을 해야 하는 이른바 세븐 일레븐 세대는 행복이 뭔지 모르며 연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노는 것도 아닌 젊은 세대에게 미래는 불행 그 자체입니다.

헝그리(hungry) 세대가 만들어 놓은 산업화의 기반 속에서 해피(happy) 세대로 꿈과 희망을 일궈갈 우리의 젊은이들이 좌절과 분노의 앵그리(angry)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앵그리 세대의 좌절과 분노를 해결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바로 우리 정치권에 부여된 책무입니다. 국민 개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정치의 핵심가치가 바로 국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이 금융·재정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주요 유럽 국가들보다 두 배 이상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토록 경제가 위기이고 나라가 위기인데도 정치권은 대다수 시민이 원하지도 않았고 명분도 불분명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선을 방불케하는 거대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서로를 헐뜯고 물고 물리는 구태의 난장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통렬한 반성과 혁신을 요구하는 천동 같은 국민의 소리에 진정 이것이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어느덧 정치는 실종되고 비뚤어진 선거만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선거입니까? 국민의 피눈물 나는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는 아픈 민심, 슬픈 민심이 성난 민심으로 융합되어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노의 파도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구차한 변명보다 머리 숙여 사죄하고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2년은 대한민국의 100년을 좌우할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중국은 차세대 지도부인 시진핑 체제가 출범되고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 주요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탄생 100년을 맞아 김정은 3대 세습을 다지며 강성대국 원년을 호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12년은 한반도 정세뿐 아니라 전세계 정세가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정치권은 21세기의 새로운 환경과 시대의 과제에 역동성 있게 반응할 수 있는 정치 유연성을 상실했습니다.

국민들을 정치의 목적이 아닌 권력 창출의 수단과 도구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생과 통합이 아닌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만연하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는 지난 20세기 망국적 정치구도와 퇴행적 정치행태를 단호하게 종식시켜야 합니다.

건국 이래 대한민국의 정당정치가 지금같이 붕괴되고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적은 없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정당정치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도 변했고 시대도 변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도 본연의 위치로 돌려놔야 합니다. 어설피 이념 대결로 국민을 양분하고 정치적 인질로 삼는 패권주의 정당은 퇴출돼야 마땅합니다.

정치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로 직결됩니다.

20세기 구태정치를 종식시키고 21세기 국민행복의 새로운 가치를 실현할 건강한 정당이 국민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의 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제대로 된 미래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통렬한 반성과 석고대죄가 필요합니다.

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은 국민의 준엄한 명을 받들어 대립과 갈등의 정치구태를 버리고 먼저 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루어낸 이 작은 통합이 국민행복을 유일한 시대가치로 지향하는 정치세력 환골탈태의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통합 자유선진당은 정치인, 그들만을 위한 정치 이익집단이기를 거부합니다.

한국 정치가 해 온 구태를 버리는 이 소중한 과업 수행을 위해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습니다. 창조적인 변화와 과감한 도전으로 천둥 같은 국민의 소리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선진당은 행복을 찾는 국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살아 있는 정책을 찾아내는 숨쉬는 정치결사체가 될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로 국민 중심, 국민 행복의 새로운 정도 정치문화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1. 정치에 관한 질문

(10시23분)

○의장 박희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해운대 기장을 출신의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해운대 기장을 출신 안경률 의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특유의 근면함과 성실함 그리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으로 반세기 만에 전 세계가 놀랄 경제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하는 저력을 보였고 무역규모 1조 달러, 수출규모 세계 7위, 한·EU FTA 체결에 이어서 한미 FTA 체결을 눈앞에 두고 선진 일류국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 성과의 이면에는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적 양극화 그리고 극심한 사회 갈등이라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와 갈등은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희망과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사회에는 치열한 집단 투쟁이 빈발하고 있고 어려운 서민경제로 국민이 전례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나라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우리

서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논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안경률 의원 많은 우리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갈등이 만연한 위험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와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대립과 갈등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300조 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극심한 갈등과 반목이 우리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우리 국가 백년대계를 새롭게 그리지 않으면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부를 비롯해 제도권들은 급속히 늘어나는 우리 시대의 다양성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글로벌 트렌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새로운 우리의 공생 발전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권력구조 또는 정부조직 또 분야별 거버넌스 등 근본적인 국가 운영의 틀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점검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혁명적인 쇄신책을 마련해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이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통합이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공생 발전을 비전으로 삼아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은 권력구조 개편이나 조직 개편 또는 거버넌스의 확충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너무 또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염두에 두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되, 우선 당장에 보다 효율적으로 그런 방면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소통과 또 민·관 협력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지금 현 시점에

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경률 의원** 그래서 미래 대비를 위한 어떤 전략팀 같은 구성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항식** 권력구조나 이런 측면에서는 정치권에서도 과거에 논의된 바가 있고 앞으로 논의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지금 사회통합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나 TF를 총리실이나 정부 부처 내에 두어 가지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경률 의원** 좀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특히 청년실업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빈부격차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에 모 일간지에서 기획한 ‘자본주의 4.0’ 이것은 우리 자본주의 공과 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고 본 의원도 잘 읽었습니다.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항식** 예, 봤습니다.

○**안경률 의원**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중소기업 CEO 89%가 ‘지금처럼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지속되면 우리 경제성장은 어렵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 또 30대 대기업의 계열사가 지난 5년간 367개가 늘었고 또 계열사 간의 일감몰아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챙기는 부당이익이 10조 원에 이른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게다가 10대 대기업 일가의 소유주식 평가액이 최근 4년간 무려 30조 원이 늘었다, 증가됐다 이렇게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 10년간 소득 상위의 20%는 1인당 실질소득이 55%나 증가했지만 하위 20%는 소득이 35% 감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우리 사회가 전형적인 2 대 8 사회가 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빗발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득 양극화 문제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특별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항식**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런 폐해가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해소하지 않고는 국가가 발전할 수 없다 하는 인식은 전적으로 갖고 있고요, 이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당위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각종 서민 지원대책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만들기 대책이라든지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필요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차차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그 문제가 어느 문제보다도 심각하다 하는 문제 의식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안경률 의원**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심각한 소득 양극화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욕으로부터 시작된 대중시위가 확산되고 있는가 하면 부유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세금을 더 내자, 부유세 운동, 말하자면 텍스 미 모어(Tax me more) 하는 그런 운동도 일부 일어나고 있고요.

(박희태 의장, 정의화 부의장과 사회교대)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 회장을 비롯한 많은 자산가들이 미국에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그런 서약 모임을 만들어서 이미 국내에서 한 300조 원에 이르는 기부금을 모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물론 우리 사회도 그동안 아름다운 기부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야채 장사 하신 임운덕 할머니 또 바느질하는 김숙일 할머니, 노량진 수산시장의 류양선 할머니 또 기부천사 김장훈 가수 또 하춘화 가수 200억 또 김항덕 중부도시가스 회장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재산기부, 신영균 전 국회의원 원로배우 500억을 기부를 하셨지요?

정몽준 의원이 200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몽구 현대차그룹이 6500억 재산을 기부하고요,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께서도 8000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했고, 유한양행의 유한일 선생께서도 개인주 8만 3000주를 이전에 기부를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도 많은 지도층이 나눔과 기부활동에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은 우리

시대의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선진화시키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은 승자 독식의 야수적인 자본주의가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것을 인본 자본주의, 휴머니스틱 캐피탈리즘 이렇게 부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본 자본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은 또 우리 지도층의 솔선수범, 자기희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층들의 자기희생이 없이는 국민들의 애국심에만 호소하는 사회는 결코 위기를 헤쳐갈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동서고금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층의 자기희생, 구체적으로 기부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국무총리 김황식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또 시민사회 등 각 경제주체들이 모두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사회지도층의 기부야말로 정말 그분들의 솔선수범이야말로 양극화 해소, 사회통합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을 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은 인본자본주의라든지 나눔·기부 문화의 확산이 정말 우리 시대의 절실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나눔·기부가 확산될 수 있는 사회운동과 더불어서 세제 혜택 등 각종 대책을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경률 의원 그래서 저는 말로만 자기희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자료를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면 국회의원, 장·차관 또 정부부처의 1급 이상 공무원들이 이렇게 제가 재산을 죽 조사를 해 보니까 공직자 2200명이 한 7조 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대기업 회장하고 부유층들이 주식하고 토지를 포함해서 한 125조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고, 또 대기업 회장들 자녀, 친인척들이 또 한 4조 정도를 갖고 있고, 200대 기업들도 많이 갖고 있고, 국내 1000대 기업의 2010년도 기준 이익잉여금 잔액을 제가 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605조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층들과 기업인들이 이미 축적된 재산을 사회에 기부해 오고 있다는 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개인적인 희생과 결단에 의존하는 기부활동도 중요하지만 좀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회의원 전원과 우리 정부 각료를 포함한 방금 말씀드린 우리 사회 지도층의 그 소중한 재산 한 5% 정도를 기부해서 ‘공생발전 선진화기금’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서 기부 문화를 확산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러한 문화 조성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걸 어떤 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하고자 할 때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돼 가지고 사회적인 전체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다음에 가능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우선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경률 의원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재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한 5% 낼 생각 갖고 있었는데 우선 총리님 개인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 방향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자발적인 것으로 행해져야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지 그걸 어떤 의미로든지 이렇게 타율적으로 강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경률 의원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이 시대에 우리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안경률 의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으면 약 40조~50조 정도의 기금을 모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무조건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모인 한 50%는 일자리 창출하고 국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한

50%를 쓰고 나머지 50%는 보육과 복지, 교육 등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데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선진화재단을 만들어서 관리하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선진화재단을 만드는 문제는 선진화기금을 만드는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기 때문에 선진화기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제 앞의 답변을 같은 취지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경률 의원** 다음은 단기적인 이런 부분이 결국은 장기적인 대책과 같이 병행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고소득자들에게 소위 ‘만석꾼 세’를 새로 신설한다든지 또는 좀더 배려하는 사회로, 일자리를 배려하는 사회로 간다든지 하는 이런 장기적인 과제도 물론 함께 검토를 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안경률 의원** 다음은 성숙한 사회 가꾸기 운동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09년에 이어서 금번 정기국회를 맞아서 성숙한 사회, 선진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버리고 개선해 가야 할 분야별 중요 과제 ‘워스트 19’ 이렇게 해서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우리 의원님들한테 오늘 오전에 전부 방으로 이 자료집을 보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사실은 지난해 3월부터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격 제고 TF를 가동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캠페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계속해야 된다……

국격을 높이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개선해 가야 된다 하는데 어떤 점을 개선해 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잠깐 그래프로 좀 보시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하기 위해서 음주소란이 일본보다 10배다.

또 연간 교통사고비가 15조다.

집회·시위 비용이 연간 5조 원이다—세계에서 제일 집회가 많은 나라다.

폭력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하다—최근에는 10대 학생들까지 심각하다.

또 에너지 수입·소비, 유류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물 부족 스트레스 국가가 곧 된다.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너무 많다.

또 명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일본은 한 4% 정도 되는데 한국은 5%이다.

인터넷시대 종이 사용률이 너무 많아진다—일본이나 미국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또 인터넷 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인터넷 중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지금 한 200만 정도 인터넷 중독자가 있는데 중고생이 위험하다.

또 도박 중독이 심각하다.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심각한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술 제일 많이 먹는 나라이다.

우리 사회 갈등비용이 300조 원이나 된다.

또 지하경제 규모가 심각하다—이 지하경제 규모는 에스토니아나 그리스 이탈리아가 세계에서 최고 많다.

또 자살률이 높다.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하위이다.

해외여행 수지가 계속 적자를 이루고 있다.

또 경조사비 부담이 너무 많다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버리고 가야 될 19개 중에 하나다, 이것 상세히 나중에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운동이 지속돼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실에서 TF 차원이 아니라 상설 국격 제고 전담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겠는지 하는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국격 제고를 위해서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각종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총리실 차원에서는 공정사회와 건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TF를 만들어 가지고 공정사회를 위해서는 80개 과제 또 건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13개 과제를 지금 추출을 해서 계속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그 안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있는 TF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까지도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그런 내용들 중에서는 각 부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그런 과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총리실과 각 부처가 그런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서로 연락 체계를 갖추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TF를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차원의 위원회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률 의원** 제가 구태여 오늘 총리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행안부장관께서 나와 계십니다마는 부처별로 맡겨 놓고 총리실에서 취합을 하지 않으면 이 일이 지속적으로 잘 안 된다 하는 경험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 점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안경률 의원** 그렇기 때문에 총리께서 좀 취합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특히 지금은 우리 가계부채가 900조 원에 육박하고 국가부채도 4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절약의 미덕을 실천하도록 총리께서 좀 선도해 주셔야 된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시대 정치의 역사적인 소명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따뜻하고 튼튼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층이 5% 재산 기부와 절약을 솔선수범해서 국력을 하나로 모으고 국익을 우선하는 18대 국회가 돼서 우리 모두 역사의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안경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김충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조 의원** 국회의 권위를 대표하는 박희태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대정부질문에 임하고 계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불초 이 사람이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 국회 정기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의미 깊게 생각을 합니다.

15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질문한다는 것은

아주 인색한 시간의 배정이다, 언젠가는 국회법을 고쳐서 아주 광범위한 토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짧은 시간 때문에 먼저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근접 거리에서 보게 되네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충조 의원** 어제 총리께서 대독하신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 대목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또 국민의 뜻을 높이 받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을 수행해 나가겠다’,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충조 의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작년 말로 해서 과거사 정리를 위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체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충조 의원** 그런데 이게 과거서부터 한국전쟁 전후 우리 민간인들이, 물론 적을 통해서도 희생이 됐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국방군 또는 국군에 의해서 학살되었다고 하는 것 잘 알고 계시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충조 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국가행위에 의한 우리 국민들의 억울한 희생,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얘기도 못 한 기간까지 포함해서 그 울분을 가슴 속에 삭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거창·산청·함양 사건, 제주 4·3 문제, 여수·순천 10·19사건 등을 비롯한 전국의 수십 군데의 이 문제들을 명예회복 하고 진상 규명 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상·배상해야 되는 이 논의가 재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 입장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동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거창 노근리사건, 제주 4·3사건 등을 비롯해서 많은 과거의 불행했던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진상이 규명되고 또 명예회복이 되고, 지금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조 의원** 필요하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충조 의원** 그러면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될까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대야소라고 하는 이 국회 구도 때문에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활동은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단히 애석하게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입법적으로 다시 또 제기될 문제가 됩니까마는 또 역시 여대야소의 국회 구도에 의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순환되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진상규명, 명예회복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피해보상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지금까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오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국회의 특별입법을 통해서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셔서 필요하다면 입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그러한 확실한 법적 근거가 없이 총리실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충조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입법부에서 입법을 해 줄 경우…… 그 입법의 필요성은 느끼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과거의 여러 사례에 대해서 진상규명, 명예회복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 문제까지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과거 사례에 비추어서 균형이 맞게 그다음에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합당한 안이 도출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조 의원** 잘 알았습니다.

전향적인 자세를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국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과거의 예에 비추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 한다면 정부로서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충조 의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제가 내년도에 열리는 국회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위 위원장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충조 의원** 작년에 제가 총리를 모시고 여수에 다녀온 적도 있고 그런데, 역시 어제 시정연설에 보면 내년에 있게 되는 핵안보정상회의 그리고 제주 세계자연보전대회 그리고 여수박람회 이것을 위해서 ‘정부 측으로서는 만전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충조 의원** 그런데 과연 만전의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는 우리가 선진국으로도 약할 수 있는 새로운 모티브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정부가 종합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는 남해안 선벨트, 남해안 동서융합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대회다 축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EXPO를 준비하는 정부 측 입장에서 그저 수치상인 정보만 바탕으로 해서 잘되고 있다, 아니면 약간만 부족한데 채우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현지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거기에 필요한 정부로서의 입장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위가 내년도 예산에 말이지요, 저는 여기 와서 수치상의 얘기는 하지 않고자 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의 마무리 단계에서 1342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944억만 반영을 했어요. 400여억 원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것을 성공적 개최를 위한다는 대응적 차원에서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항상 조직위 측이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많은 예산이 배정되면 더 나은 대회를 치룰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겠지요.

그러나 국가재정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 하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또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과연 꼭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하는 것을 더 챙겨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더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충조 의원 여수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수 외곽지대까지 SOC 구축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구축이 됐다고 봐지는데 문제는 시내도로가 아주 교통체증을 예견시키고 있는데, 여수시는 금년도 총 예산이 8613억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채가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52%인데 여수는 28%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에 총리께서도 직접 그 현장도 가 보셨겠습니까마는 신항 지역이 지금 박람회 전시장인데 신항 지역과 구항 지역을 연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냉담하고 있는데 이 도로, 신·구항 연결도로를 200억 공사 가운데에서 여수시가 자체적으로 100억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나머지 100억 이것 정부가 꼭 지원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점검을 했고 그 과정에서 공용 터미널과 박람회장을 연결하는 도로 문제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조치를 취하고 또 고가도로를 만드는 문제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구항과 신항을 연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재정상 또 그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비로는 지원하는 한계가 있어서 그리 못 하고 말았습니다.

국비 지원은 법률상은 곤란하고요. 다만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있겠습니까마는 지난번에 그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조 의원 아니, 이 문제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검토된 게 아니고 다른 것을 얘기했지요, 그때는.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구항과 신항 연결하는 그 부분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고가 지원하는 것은 법률상 어렵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또 우회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노력을 했는데 현실

적으로 그것이 어렵다 하고 터미널과 박람회장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고가도로를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여하튼 지원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조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까운 시간을 다 얘기할 수 없고요.

그리고 2010년에 코펜하겐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2012년도에 제18차 기후변화와 관련된 당사국총회를 우리 한국에서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것, 세계에 선포한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충조 의원 그래서 지금은 카타르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 11월 달에 남아공에서 이 문제가 결정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경남 서부권 그리고 전남 동부권 10개의 시·군이 광역엑스포권에서 이 기후변화 당사국총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보고받았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조 의원 이것이 꼭 사전에 국내 후보지를 결정해 가지고 꼭 광역엑스포권, 여수엑스포권에서 이것을 개최함으로써 박람회를 통해서 확보했던 SOC나 전시시설, 숙박시설 등등 또 자원봉사자 5만 명에 달하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드리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녹색성장 이 국정철학도 일정 부분 이행된다 이렇게 보는데 관심을 갖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우선 총회를 유치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총회가 유치된다고 한다면 그 회의의 규모라든지 모든 절차 등을 감안해서 적정한 지역에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후변화 해법의 메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지역이 어디인지 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하는 가운데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충조 의원 꼭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합니다.

특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서 묻습니다.

총리께서는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네덜란드의 철학자 에라스무스 폰 로테르담, 참으로 유명한 법언을 남겼는데 ‘동전 한 닢을 훔친 자는 처벌된다. 그러나 공금을 횡령하거나 독점, 폭리, 음

모, 사기로 거액을 훔친 자는 상류층 사람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면죄부를 갖기가 쉽다. 독극물을 먹인 자는 살인죄로 처벌되지만 물을 포도주에 타거나 또는 썩은 기름으로 국민을 우롱한 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법언을 남긴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처음 듣습니다.

○김충조 의원 아, 처음 듣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충조 의원 네덜란드의 철학자 에라스무스 폰 로테르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에라스무스는 알고 있습니다 마는 그 말씀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김충조 의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법언으로 돼 있습니다.

또 어제 시정연설을 인용하겠습니다. '부조리, 부정부패는 시한을 두지 않고 마지막까지 철저히 척결하겠다' 또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지위고하를 망라하고 엄단하겠다',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충조 의원 지금 중수부의 입장에서 과연 이와 같은 정부의 의지, 대통령의 의지,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리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저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청와대 수석이 구속되고 또 관련된 문제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엄정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조 의원 대한민국 검찰처럼 무소불위한 기구가 어디가 있습니까? 수사 종결권, 독점권,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수사권, 수사지휘권, 자체수사력, 검찰과 경찰의 조서 증거능력의 차이, 세계적으로 이런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진 검찰이 우리나라 말고 또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은 권한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충조 의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지향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륙법계 또는 영미법계, 영미법계에서는 더욱 그렇지만 대표적인 나라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가지고 이런 나라가 있는지 그것 답변을 못 하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물론 검정 수사권의 독립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차이가 있지만 단순히 검

찰권이 얼마나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충조 의원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 다섯 나라에 대비하더라도 이런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총리께서 제 질문 요지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 갖고 오신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 내지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해야 된다고 국회에서 논의가 됐는데 이러저러한 연유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못 되고 있는데 첫째로 이런 문제,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인지하셔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검찰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당위입니다, 당위이고. 또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점은 분명히 있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이유만으로 검찰청과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게 되면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혼란이나 부작용,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현재의 검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또 운영의 묘를 살려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더 우선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선 제 생각입니다.

○김충조 의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총리께 특별수사청 설치 문제를 질문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특별수사청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2007년도에 대검찰청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보다 수사에 있어서 앞서 나간 선진국가들에 대한 제도를 연구했었는데 왜 그 연구가 됐느냐 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최근 범죄가 점점 더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른 특별수사청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더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을 위해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특별수사기구에 대한 연구를 한 바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충조 의원** 영국은 왜 빠졌어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김충조 의원** 영국은 뺐네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영국은 아마 미국, 영미가 비슷한 제도로써 사인소추에서 비롯된다고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 형사사법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만한 국가들에서는 검찰과 별개의 특별수사기구를 창설한 것이 아니고 기존 수사체제를 개편한 광역 단위의 특별수사체제를 운영해서 수사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김충조 의원** 영국의 SFO 특별수사청, 제가 영국 얘기를 한 것은 이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념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여러 가지 제도를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충조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총리께서 시계적으로 운운하시면서 특별수사청 설치 문제 논의에 대해서 아주 확 긍정적으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한나라당의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께서 2009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작년 3월 달에 공표했던 검찰에 관한 국민의 신뢰도 문제 보셨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김충조 의원** 국민들이 검찰에 신뢰를 보낸다, 17%. 그런데 대단히 아이러니컬한 것은 검찰관계 공무원들은 54%,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일부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수사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썩 높은 신뢰를 받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검찰이 지금까지의 결과를 거울삼고 반성을 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조직으로 태어나도록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충조 의원** 아까 총리께도 질문했습니다마는 과거사정리 문제……

1948년 제노사이드 협약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김충조 의원** 또 1949년 제네바 협약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김충조 의원** 이런 것들이 바로 국가에 의해서 집단학살된 우리 국민들이나 주민들 이런 분들에 대한 처벌시효는 무시돼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2007년도에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 아니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김충조 의원**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검찰에서나 우리 사법부에서나…… 사법부는 물론 이 시효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과거사 정리를 이와 같은 제노사이드 협약이나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렇게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여수, 순천 등 민간인 여러 가지 희생 사건에 대한……

○**김충조 의원** 여러 군데 많습시다.

○**법무부장관 권재진** 지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내법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국제법규로는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집단의 구성원을 상해하는 행위를 집단살해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민간인 사례들이 국내법과 국제법의 이 규정에 해당이 되는지 그 규정 내용과 국내외의 판례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조 의원** 알았습니다.

이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시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진실화해를 통해서 과거사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항구적으로 그런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김충조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 요.

통일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취임을 축하합니다.

○**통일부장관 류우익** 감사합니다.

○**김충조 의원**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 경색, 그런데 최근에 와서 대내외적 정세가 약간, 우리 장관께서 취임하실 때 강조했던, 약간 대내외적 정세가 부드러워진다고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충조 의원** 아니, 그리고 우리 장관께서도 ‘원칙을 지키되 유연성을 확보해 나가겠다. 또 폭을 넓혀 나가겠다’ 이런 요지로 말씀했잖아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충조 의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트는 물꼬로 금강산 관광을 다시 한 번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 보겠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금강산 관광 재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도발을 한 북측에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약속을 확실히 해야 되고, 또 지금 이루어진 몇 가지 조치를 원상으로 복구하는 조치가 먼저 행해져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북측과 대화로 풀어갈 용의는 커지고 있습니다.

○**김충조 의원** 우리 장관께서 금강산 관광 관련해 가지고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북한 당국이 김정일 위원장의 재발방지 약속을 확인만 해 준다면 공식적인 것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말씀, 어떻게……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예, 민간에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 약속이 당국의 약속으로 확인이 돼야 된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충조 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정은 회장과 관련된 얘기겠네요?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예, 그렇습니다.

○**김충조 의원** 그러면 이것이 사후에라도 확인이 되면 그것은 확인으로 간주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 확인을 북측에서 북측 당국이 확인을 해 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충조 의원** 당장의 전면적인 관광 재개가 어렵다고 한다면 시범적 케이스 또는 이산가족 상봉의 부분적인 시행 등등과 연계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다른 문제에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질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충조 의원** 그러면 여기서 물꼬를 터 가지고 개성공단 문제도, 지금 거기가 자산이 동결되고 허가권이 취소되고 이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그 연결선상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안위 위원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장관과 질문 안 하는 것이 상례인데 할 수 없이 합니다,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지요, 1972년에 있었던?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김충조 의원** 벌써 37년 전 일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김충조 의원** 그 2년 뒤에 닉슨이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렇습니다.

○**김충조 의원** 사임을, 미국 역사상 처음이고 아주 불명예스럽게……

대한민국에서 이 도청 사건이 발생한 거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국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조 의원** 그 묘한 것이 워터게이트 사건도 그때 닉슨이 자기의 비밀 첩보원들을 보내 가지고 민주당 중앙위원회를 도청하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 당 이름이 똑같아요, 여기 한국하고, 그렇지요?

이 문제 지금 수사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관 말씀 좀 들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그런데 지난번에 민주당 대표실, 이른바 불법도청 사건과 워터게이트 사건을 직접 비교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하게 수사가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충조 의원** 3개월이 지금 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김충조 의원** 그리고 제가 ‘적절치 않다’ 뭐 이런 얘기 듣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정권이 넘어지는, 도청 문제가 정권이 넘어지는 거와 연결이 되고 지금 뉴스 오브 더 월드(News of the World), 영국의 경우는 168년 된 신문이 문을 닫았어요. 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유념해서 가지고 꼭 조기에 무슨 가시적인 수사 성과가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잘 알겠습니다.

○**김충조 의원** 이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불명예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김충조 의원**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할 얘기를 주마간산(走馬看山) 격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30초밖에 남지 않았네요.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임기 60개월 중 16개월을 남겨 놓고 있는 이명박 정부 그리고 현 정부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여당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사성어를 인용하겠습니다.

축록자 불견산(逐鹿者 不見山),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슴은 졸속과 가벼움과 편견과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산은 아름다움과 멋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순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고사성어를 정부와 여당에게 정중한 충고로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김충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대문갑 출신의 한나라당 이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현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대문갑 출신 이성현 의원입니다.

저는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2011년 오늘 우리는 시장경제 시스템의 세계사

적 변환기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수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유럽을 거쳐서 자본주의의 심장이라는 월스트리트를 점거하고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장 일변도의 무한경쟁, 이로 인한 부의 집중과 양극화의 심화, 재정 긴축과 복지 축소, 실업률 증가 등이 수많은 사람들을 거리 시위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노의 응집은 경제위기에서 촉발되었지만 그 핵심적인 배경은 정부와 정치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기성 정치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성 정당의 힘이 약화되고 해적당과 같은 신생 정당이 속속 출현하고 있는 유럽의 사례가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부와 기성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합니다. 정치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 심각한 위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가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책임정치가 실종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의 맹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득권에 안주하여 시대의 흐름과 요구를 읽지 못했습니다. 상시적 생존 불안에 시달리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했고 정치 변화에 대한 욕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출구는 새로운 것을 향한 입구라고 합니다.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정당정치와 책임정치 복원을 위한 일대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먼저 국민과의 소통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문화 환경에 적극 조응하는 디지털 정치시대의 청사진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조직동원형 정치문화는 그 생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은 유권자 참여 시스템을 개발하여 정당과 국민 간의 실시간 소통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당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정치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검증된 공직후보를 추천하는 것이야말로 정당 존립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장 후보를 둘러싼 야당의 행태에서 보듯이 스스로 존재 의미를 포기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스스로가 본질적 책임을 저버리고 불임 정당을 자처한다면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승리 지상주의에 매몰돼서 정당 스스로의 정체성, 가치와 노선을 포기하고 심지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검은 돈까지 주고받는 구태 정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시민단체의 권력이 정치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클수록 대안세력으로서 시민단체 권력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권력의 실체를 살펴볼수록 과연 이런 현상이 정치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깊은 회의를 느낍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시민단체들은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순수한 시민운동을 통해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민단체도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순수 시민단체가 있는 반면에 권력 집단으로 변질하고 있는 거대 시민단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몸집을 불리고 영향력을 키워서 정치권력에 접근하고 정치권력에 진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자료의 일부만 살펴보더라도 상당수 거대 시민단체들이 대기업 지원금과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NGO여야 할 시민단체가 국민 세금을 쓴다면 이미 정부 산하기구나 다름없습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생명인 시민단체가 대기업의 돈으로 운영된다면 이미 시민단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부가 시민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2000년 1월 12일에 제정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현 의원 안 가지고 계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성현 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1만 개에 달하는 시민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2011년에

222개 기관에 대해서 98억 7000만 원을 정부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성현 의원 총리께서는 지난 2006년 8월 달에 발간된 참여연대 보고서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못 봤습니다.

○이성현 의원 못 보셨어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성현 의원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NGO 단체인 참여연대의 실체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05년 8월 3일 날 참여연대에서는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를 해부한다’는 제목에서 A4용지 64장 분량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삼성이라는 기업이 고위공직자, 법조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파워 엘리트들 사외이사 등으로 임용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 하고 비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8월 달에 발간된 참여연대 보고서를 보니까 ‘참여연대는 시민운동계에 있어서의 삼성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연대 임원 중에서 공직자 진출 현황을 보니까 2006년 당시의 임원 중에서 150명이 총 313개 공직에 진출했습니다. 이 313개 중에서는 121개 공직이 청와대 관련 직책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에 참여연대는 단순한 시민단체가 아니라 국가 기구 요소 요소에 침투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또 하나의 권력이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래 박원순 후보의 아름다운재단을 운영하면서 대기업 기부금 문제가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참여연대가 대기업을 비판하면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을 받는 식으로’라고 비판하고 있고, 박 후보 측에서는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은 전혀 별개의 조직이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연차 보고서를 보니까 2000년도 창립 이후에 2010년까지 11년 동안에 무려 928억의 모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모금을 한 단체가 또 있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현 의원 잘 모르시겠어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성현 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많은 시민단체가 있지만 이렇게 많은 후원금을 모금한 단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모금한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아름다운재단에서 전달된 기부금의 일부는 참여연대로 또 흘러간 면도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동북아 군비동결캠페인이라든지 한국 평화활동가 워크숍 등에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지원을 여기에서 했습니다.

또 인터넷 보도에 따르면 이 아름다운재단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로 불법시위 단체로 지목되어서 정부 지원이 끊긴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이 정관에 나와 있습니까라는 이렇게 정치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가 과연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김황식 시민단체는 여러 가지 기능 또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활동의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단체와 관련해서 제가 견해를 표명하는 것보다는 원칙적으로 시민단체는 그야말로 이를 그대로 순수성을 유지를 하면서 시민사회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일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이성현 의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민단체 아름다운재단은 행안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럴 것입니다.

○이성현 의원 그러면 이런 등록된 단체가 목적 외의 활동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물론 목적 외 활동을 하게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것입니다.

○이성현 의원 취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성현 의원 지금 아름다운재단 정관 제3조를 보게 되면, 3조3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재단은 정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단체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체가 서울시장의 후보를 내고 있고, 이렇게 반정부 활동을 하는 많은 단체에게 후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면 정관에 의해서 목적에 맞는 행동을 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정관에 정치적인 중립성, 정치단체의 후원 같은 것은 금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참여연대나 광우병 관련 단체 지원했다고 하면 이것은 정치단체가 아닌 것으로 아마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지원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그것은 견해에 따라서 해석해서 따져 볼 여지는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성현 의원 그러니까 저는 총리께서 이것을 실제로 정관 외의 목적활동으로 가면서 대기업으로부터 900억이 넘는 후원금 받아서 반정부 활동하는 단체에 계속해서 지원하고 또 정치권력을 탈취하려고 한다면 논하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다시 한 번 정확히 들여다보셔서 정관에 맞도록 활동하도록 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무총리 김황식 물론 시민단체가 위법한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아름다운재단의 경우에 소정의 그러한 행위들이 어떻게 평가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하는 것은 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관련 기관에서 그런 문제들을 검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현 의원 제가 탈취라는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시민단체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또 시민단체 활동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문제들이 챙겨 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현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 혹시 '삼포세대'라는 얘기를 들어 보신 적 있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성현 의원** 삼포세대가 뭘 말하는지 혹시 아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이성현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을 졸업한 젊은 학생들이, 이 청년층의 기약 없는 취업 준비라든지 불안정한 일자리 또 학자금 대출 상황 또 치솟는 전셋값 이런 문제 때문에 아예 연애나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를 삼포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청년층의 슬프고도 굉장히 참담한 자화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가슴이 아픈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 등록금이 OECD 국가 중에서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한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현 의원** 그렇지요? 두 번째로 높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성현 의원** 지금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대학생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서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일정한 재정을 투입을 해 가지고 특히 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적은 그런 계층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려고 예산안을 그런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성현 의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다고 말하지만 바로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부분을 제거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공립대학교 기성회계 조사 결과를 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현 의원** 지금 보면 국립대학교에서 등록금 인상률이 사립대학교보다 높고 지난 8년 동안에 66.8%나 폭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형적으로 기성회비가 79.1%를 이뤄 가지고 이렇게 폭등을 만들었는데 이 기성회비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급여보조성 기

성회계가 지금 핵심인데 이것은 법에도 없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성현 의원** 그러니까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급여보조성 경비를 기성회계에서 3000억 이상 편법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왜 시정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기성회수당 지급 등이 등록금 인상의 중요한 요인이다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부에서 그 점에 대해서 여하튼 기성회비가 그런 쪽으로 또 사용되어 가지고 등록금 인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직원의 급여성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전면 폐지를 한다든지 또 연구보조비에 관련해서도 그것이 월정액이 아닌 급여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감사 결과들이 나오면 정부에서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점검을 해서 지금 지적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현 의원** 실제로 급여보조성 기성회비만 폐지해도 학생 1인당 적게는 4만 원에서 145만 원까지 등록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결과가 나오면 실제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폐지를 하셔서 등록금을 사실상 낮출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정부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차제에 모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할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현 의원** 지금 우리 청년층의 실업률이 얼마나 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최근 자료로는 한 6.3% 정도 됩니다.

○**이성현 의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그런 대안이 있으신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아시다시피 청년 실업 문제는 하루 이틀 나온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심각성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 전체적인 구조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

문에 그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데 그것은 대학 진학률이라든지 또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실제로 제공되는 일자리의 미스매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 해결을 위해서 정부에서 각종 노력을, 청년실업대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요컨대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좋아하는 문화나 관광 쪽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서비스산업 또 신성장동력 이런 쪽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기왕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 인턴이라든지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정말이 문제는 우리가 참 사회양극화 중에서도 또 중요한 문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성현 의원** 총리님께 이 부분은 노력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정말 정부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총체적으로 대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총리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총리실에서 이것을 전폭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가는 데 힘을 좀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청년 실업 해소, 고용 촉진을 위해서 총리실에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가 구성되어 있고, 물론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하지만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해 가지고 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대통령실 차원에서는 고용전략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다층적으로 다방면으로 이러한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실업 문제가 어렵다, 실업 문제가 어렵다 하는 것이 언론이나 또 정치권의 주장에 의해서 많이 알려져서 국민들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 그런 대목에 있어서 정부로서도 조금 아쉬운 대목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6.3%는 7% 이상이 되어 있던 것에서 상당히 내려간 거고……

○**이성현 의원** 그런데 총리님, 그것은요 체감실

업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 6.3%가 아니라 훨씬 더 많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물론……

○**이성현 의원** 우리 이웃을 보게 되면 정말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습니다. 물론 구직을 포기하거나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체감과 통계상의 자료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노력도 아울러서 병행을 하지만 그런 똑같은 통계 기준에 의해서 보더라도 어쨌든 통계가 좋은 쪽으로는 다소 진전되고 있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실제 체감하고는 또 상당히 차이가 있다 하는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성현 의원** 이렇게 국정과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최우선적으로 청년층 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데 여기에 좀 비중을 두어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이성현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투표에 대해서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성현 의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외교부가 그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외교부가 협력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명 가까이 해외에 파견을 해 가지고 모든 재외선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현 의원** 지금 현재 재외선거 유권자가 거의 한 230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현행법에 의해서 투표를 할 경우에 지극히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11월 달 1차 모의투표 했었는데 그때 LA 총영사관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때 LA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온 사람이 딱 한 명 왔습니다, 한 명. 그러면 지금 전체 230만 중에서 38%가 미주 지역에 있는 동포들인데 이렇게 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제도는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투표할

수 없도록 한 거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것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당연히 제도가 도입됐으니까 많은 재외 국민들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직접선거 원칙이라든지 비밀투표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출 수밖에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나라의 주권과 충돌할 수 있는 여지를 제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좀 고려한다 하더라도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은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현 의원** 지금 프랑스만 하더라도 약 500 곳 정도에 투표소를 설치해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164군데거든요. 따라서 우선 투표소를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투표소를 많이 늘리는 것.

또 하나는 유권자 등록을 할 때 본인이 직접 와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비행기 타고 와서 유권자 등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주게 되면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투표는 정작 본인이 오더라도 등록할 때는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바꾸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에서 하겠습니까마는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정부 입장에서도 우편 등록하는 방법 자체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방안 아니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반영해 주시면 그 부분은 시정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성현 의원** 실제로 할 수 없는 얘기를 약속해 가지고 재외동포들에게 우롱당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실제로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서 많은 국민들이 기·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성현 의원**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서 가야만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안정적인 마무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권 치적에 대한 집착 때문에 다음 정부,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는 일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임기 후반의 갈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도 제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중오의 정치, 뽀렘의 정치를 버리고 정당정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의 분노와 변화 욕구를 참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부터 구축하십시오.

시민단체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경유착과 권언유착이 무서운 종양이듯이 일부 거대 시민단체가 재벌과 유착하고 권력과 결탁하는 것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면서 정치권력, 경제권력, 문화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다 함께 분열을 넘어서 통합의 정치로 나아갑시다. 성공을 넘어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갑시다.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가치로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이성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장흥·강진·영암 출신의 민주당 유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장흥·강진·영암 출신 민주당의 유선호 의원입니다.

최근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에 대해서 검증한다는 명분으로 매카시즘적 또 적대적인 공격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증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치를 환멸로 몰아넣는 행태로서 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이러한 검증을 한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백신을 치료하는 꼴입니다. 이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 김황식 총리, 원세훈 국정원장, 안상수 전 대표, 강만수·정중환·이만의·윤증현 장관 등등등 병역 미필자가 주축이 된 정권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병역문제를 검증한다는 것입니까?

열세 살 먹은 소년 박원순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입양을 했다는 주장은 병역 기피에 익숙해 온 한나라당 입장에서나 가능한 논리입니다. 혼한 말로 뭐 눈에는 다 그렇게 뒤편만 보이는 것입니까? 네거티브 경쟁은 당장 때려치우십시오.

자신의 오만과 독선을 돌아보지 않고 반대자에게 자행되는 무차별적인 공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 안철수 바람으로 대표되는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불신의 주인공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식 정치를 하고 있다”며 여의도 정치를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명박 대통령 본인은 어떠했습니까? 반대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았습니다. 임기 4년 내내 오만과 독선으로 석기시대만도 못한 정치 부재와 소통 부재로 정치를 실종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 대통령입니다. 오죽했으면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를 제일 못했다고 평가까지 했겠습니까?

문제는 불행하게도 아직도 그 사실을 대통령과 청와대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이 존중되지 못하고 농업이 포기되는 오늘의 대한민국, 아무리 공부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아무리 일해도 빈곤층을 탈출하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 이것이 정치를 실종시킨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4년간의 업적입니다.

이제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의 이 잘못된 방향을 수정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첫째, 대통령은 재집권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야당과 소수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정치로 돌아와야 합니다.

둘째, 4대강 사업과 뉴타운 정책 등 이른바 고용 없는 토건 정책과 감세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셋째, 박태규 이국철 등 권력형 게이트와 연루된 측근들의 비리 척결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 제기된 윤석용 의원의 옥매트 불법수수 의혹 등 일련의 부패 비리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말고 남은 임기 만이라도 야당과 소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원칙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18대 국회의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바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사저 신축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 퇴임 후에 사저의 신축부지를 대통령 아들 명의로 구입한 것이 문제가 되자 ‘실질적인 소유는 대통령 내외의 것이고 법률적으로는 아들의 것이다’ 이렇게 해명한 것이 맞지요, 당초의 그 보도가?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일단 물론 대통령께서 사시려고 했는데 취득 자체는 아들 이름으로 땅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그리고 실제로 계약당사자 및 자금의 출처도 일응은 아들의 책임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취득한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유선호 의원 그런데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통령 명의로 이것을 바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바로 대통령 명의로 사는 경우에 지가의 문제라든지 그밖에 경호시설과 관련된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아들 명의로 취득을 해 가지고……

○유선호 의원 대법관까지 하신 우리 총리께서 그런 건강부회의 말씀을 너무 장황하게 하시는 것은 맞지가 않고……

○국무총리 김황식 제 설명도 듣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제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시면 좋지요.

○유선호 의원 제가 좀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유선호 의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있지요, 3조에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유선호 의원 대통령이 자신의 실제 소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사들였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의를 차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등기를 하면 그것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아들 이름으로 아들이 취득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취득을 해 가지고 나중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토지소유권도 다시 대통령 앞으로 이전을 하고……

○**유선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국무총리 김황식**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실명제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유선호 의원**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능력도 없는, 아드님의 전 재산이 3000만 원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유선호 의원** 아들에게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한 것이 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총리 말씀대로 가면 그런 결론에 또 빠진다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지는 않지요.

편법 증여,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금을 대 주고 아들이 취득하는 것으로 하면 그게 증여가 되겠지만 어쨌든 계약주체가 아들이고 자금을 담보를 제공을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아 가지고 지급한 것이라면 그것은 편법 증여 문제는 안 생기지요.

○**유선호 의원**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인데 의도가 조금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실명법 위반으로 지적이 되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슬그머니 원 위치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겠습니다.

이 원위치의 방식의 실제적 진실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이시형 씨로부터 다시 사 간다는 것입니까? 만약 산다면 그 가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현재 토지에 대해서는 아들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대통령이 다시 취득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매매형식으로 해서 이전등기가 될 거고 그리고 그 대금은 당사자 사이에서 실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유선호 의원** 총리 말씀은 지금 편법 증여의 해소라기보다는 명의신탁의 해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국무총리 김황식** 명의신탁의 해지가 아니…… 명의를 빌려준 것보다도 일응 실제적으로, 법률적으로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일단 아들이 사고 그것을 대통령이 인수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진행된 일인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건축관계가 될 때에 그 단계별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와 같이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차제에 이 토지부터 우선 당장 다시 대통령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전을 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나온 그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호 의원** 총리는 대법관 출신이신데 오늘 말씀이 들을수록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들이 땅을 샀다가 아버지에게 양도하면 취득세를 두 번 부담하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까지 내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불투명한 거래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취득세 두 번 내게 되는 문제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취득세는 전체 재산에 비해서 그 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양도차익이 있어야 내는 거고, 증여세는 정당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도 안 생기고……

○**유선호 의원** 아니, 대통령 명의로 바로 사면 되지 뭐 하러 비싼 세금 물고 관공서를 몇 년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시간 낭비를 합니까? 국민들이……

○**국무총리 김황식** 그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 명의로 사는 경우에 그것이 노출되어 가지고 경호시설의 모든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노출되는 것은, 어느 일정 시점까지는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응 아들로 하여금 명의로 사게 하고……

○**유선호 의원** 국민들을 생각 안 하시고 그로 인한 편익만 계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국민 편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지요.

○**유선호 의원**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취득세는 두 번 부담하게 되지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유선호 의원**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내가 추궁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나머지 5억 원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친척한테 빌렸다는 돈이 맞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유선호 의원** 왜 빌린 사람 이름을 떳떳하게 공개를 못 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사안이 아니고 제가 알지 못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유선호 의원** 아니, 우리 공직자들 다 등록재산 해서 공개하고 국민들한테 밝혀야 되는 것이 공인의 자세 아닙니까? 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인데 왜 대통령께서 빌린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밝혀주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어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가까운 친척에게 빌린 것이다. 친척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어렵다. 정당한 차입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호 의원**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밝히도록 건의하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나 김대중 대통령의 하꼬방 같은 동교동 사저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아방궁이니 호화주택이니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총리께서도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들었습니다.

○**유선호 의원** 그러면 봉하 사저 가액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가 약 1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내곡동 사저가 신축되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울트라 아방궁이라 부르면 되겠어요?

○**국무총리 김황식** 김해하고 서울의 지가,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 경호시설에 관한 가격은 지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지만, 그러나 실제 땅의 크기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투입되는 예산이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정해졌고 또 국회에서 편성된 그리고 집

행되는 40억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선호 의원** 그 말씀은 앞으로 실제적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또 오늘의 말씀이 건강부회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약 잘못이 있다면 저는 솔직한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게 복잡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유선호 의원** 됐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 정권 장관들의 인사청문회에 등장한 단골 메뉴가 위장 전입·증여, 투기, 얼마나 많았습니까? 돌이켜 보니까 이 모든 원인들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순간에 그런 참담한 생각을 갖습니다. 역장이 무너집니다. 서민들의 가슴에 피눈물이 맺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대통령은 즉각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퇴임 이후를 걱정할 한가할 때입니까? 세계적 경제위기니 국내 물가대책이니 얼마나 현안들이 많습니까? 이제라도 내곡동 사저 계획을 철회하고 국회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검소하게 그리고 절차적으로 투명하게 다시 준비하도록 건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국회에서 편성해 준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논현동 사저가 있는데 논현동 사저로 돌아가는 경우에 현재의 여건에 비추어서는 거기에 경호시설도 갖출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쪽으로 정했다 이렇게 듣고 있고, 이것은 물론 국민들,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과도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통령이 사과하거나 다시 철회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선호 의원**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게 들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진실성, 솔직함 그리고 겸허한 자세만이 신속하게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이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가 제가 총리께 경제상황이랄지 FTA

문제랄지 또 낙하산 인사 문제 등 질의할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 계시다가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과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동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야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엄중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체육회의 윤석용 회장이 장애인선수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후원물품들을 자신의 지역구인 강동구에 뿌리고 또 한나라당 의원 5명에게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유선호 의원** 당사자인 윤석용 회장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지금 회유와 협박으로 장애인체육회 직원들에게 증거 조작을 지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장애인체육회 노조성명서를 통해서 윤석용 회장은 옥매트와 축구공 외에도 홍삼보조식품, 김치, 기본적인 후원물품마저 강동구로 빼돌린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직원을 자신의 지역구인 강동구 주민으로 채우고 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을 동원해서 무상급식 반대 가두홍보나 벌이게 하고, 이 장애인체육회를 자신의 사금고·사조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직원들을 불러서 여당 국회의원을 누가 건드릴 수 있겠냐며 자술서를 쓰게 하고 후원물품 장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장관, 회유와 협박으로 직원들의 입을 막고 증거 서류를 조작한다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윤석용 회장이 장애인체육회에 후원될 옥매트와 축구공 등을 자신의 지역구에 뿌리고 한나라당에 전달한 것은, 저는 이것은 분명히 횡령 행위이고 또 기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즉각적인 수사를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사안 내용을 파악해 보고 수사 착수 여부와 또 실제적 사실관계가 파악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선호 의원** 지금 증거 인멸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고발하기 전에 즉각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장애인체육회 이사에 시장후보도 또 들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사실 은폐를 막기 위해서 즉시 이사회가 열려서 윤석용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윤석용 회장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관, 이 정권 말기에 들어서면서 권력 주변에서 지금 부패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박태규 개인의 비리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측근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권력 게이트임이 밝혀졌습니다.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금감원이 저축은행 PF 대출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도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자세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유선호 의원** 이는 말할 것도 없이 부실 저축은행을 가려내 가지고, 옥석을 가려내서 퇴출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저축은행도 퇴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2010년 4월에는 김황식 총리가 감사원장이던 감사원이 저축은행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장관도 이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선호 의원**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부실 저축은행 퇴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나라 최고의 금융전문기관과 감사조직이 투입되기도 단 하나의 부실 저축은행도 퇴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박태규라는 인물이 청와대와 감사원을 비롯해서 이 정권 실세들에게 집중적인 로비를 했고 그 결과 부실 저축은행의 퇴출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벌써 권력 실세인 김두우 전 홍보수석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구속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저축은행 문제는 박태규 개인 비리가 아니라 권력형 게이트인 것이 너무도 명확해진 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감사원 타 기관의 업무 수행을,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한 데 대해서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다른 기관의 업무 수행 경위나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축은행 퇴출이 없었던 것은 주무부서에서는 금융기관, 그러니까 저축은행에 대한 퇴출이나 이런 부실 정리 문제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큼니다. 그런 파장을

고려해서 뱅크런도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고, 저축은행의 자구노력도 촉구해야 되고 그런 데 대해서 아마 기간이 걸렸고, 그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적극 대응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박태규 사건 관련 문제는 현재 검찰 수사 중인 만큼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하고 검찰에서 현재 일체의 다른 고려를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호 의원** 말씀은 좋은데 당초에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초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을 뺐다가 청와대 지시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저축은행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이 처음부터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유선호 의원**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시중에는 저축은행 로비사건의 중심인 박태규 씨와 접촉한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수많은 정권 실세들의 명단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관, 혹은 이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위는 답변드리지 못합니다만 저축은행 관련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현재 철저히 수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호 의원** 이처럼 부실 저축은행 퇴출이 2008년 12월 이후 계속 보류되면서 2008년 이후에 부실 퇴출은행에 예금자로 가입한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가 됐습니다. 지금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2만 5000명 중에서 2만 명에 상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피해자들입니다. 결국 이들을 이렇게 피해자로 만든 것은 금감원 그리고 감사원이 전수 조사를 통해 부실 저축은행을 밝혀내고도 퇴출시키지 않은 이명박 정권의 책임입니다.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무부처가 금융감독기관이고 그 금융감독기관들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축은행 정리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해야 되고 그 밖에 여러 요소들, 감안해야 될 요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관계기관에서 적극 대응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문제는 지금 현재 합동수사반에서 책임재산 문제나 은닉재산 같은 것의 환수 등을 통해서 피해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호 의원** 검찰의 수사 태도가 하도 미흡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국철 회장 사건도 물어보겠습니다.

이국철 회장은 지금 자신이 준 신용카드를 청와대 참모들이 돌려가면서 사용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재민 전 차관은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국철 회장이 현직 검사장에게 1억 원을 줬다는 진술이 나왔고, 법무부장관이 연루되었다는 그런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은 부패의 공동정범으로서 그 누구도 성역 없는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음도 밝혀졌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권력형 비리 의혹, 측근 비리 의혹, 검찰 부패 의혹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국철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에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성역 없이 철저히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것을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은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검찰에서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선호 의원** 장관이 그렇게 소신이 있으신데 왜 이국철 회장이, 고발자가 마치 피의자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괴롭히고 주객을 전도시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이국철 씨는 우선 언론을 통해서 폭로를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이자 그 폭로 과정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서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상태, 피고발인입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지 이국철 씨에 대해서, 이국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피의자 신분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선호 의원** 야당 인사들이 들어가면 검찰이 앞장서서 피의사실 공표에 나서고 이국철은 보안에 그렇게 검찰이 앞장서서 보호해 주고 이런 비

접한 태도는 앞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도 국민을 섬기지도 않고 정책의 실패를 호도하는 정권들이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점을 명심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유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 출신의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진 의원** 경기 부천 소사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님, 부탁드립니다.

총리님께서서는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시민후보라 자임하는 박원순 후보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정부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서 그 억울한 장교들이 수장되는 결과를 낳지 않았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자극을 안 했으면 북한이 침공 안 했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천안함 사건의 궁극적인 원인책임자는 우리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차명진 의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극 안 했을 때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DJ 정부 때 1999년 6월 제1차 연평해전이 발생했고 역시 DJ 정부 때 2002년 6월 제2차 연평해전이 발생했습니다. 북한과 우리가 사이 좋았던, 자극을 하지 않았던 때도 북한은 도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

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이 뒤로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도발 원인은 무엇입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우리하고 상대적인 관계보다 자기들 자체 내적으로 필요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차명진 의원** 최근에 북한은 김정은 3대 세습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또 내부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도발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왜 박원순 씨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이 도발하게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분이 어떤 취지에서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차명진 의원** 북한의 도발에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면 저는 이런 발언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말을 잘하고 책도 쓰신 이 사회의 인텔리겐차(intelligentsia)인데 이런 말을 함부로 했겠습니까?

다음, 박원순 씨는 그의 저서 ‘국가보안법연구 1’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한반도 내에 엄존하는 정권으로서, 다시 말하면 동등한 파트너로서 국가의 존재가 사실상 인정되고 있는 마당이다.

총리님, 총리님은 한반도 내에서 북한이 하나의 엄연한 국가로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헌법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우리 헌법 체계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명진 의원** 헌법 체계라니요?

총리님, 저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가장 최고의 규범 준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총리님도 왜 헌법 체계상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명진 의원** 총리님, 이것은 제가 이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국제적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입니다. 독도에 대한 자기들

의 일정한 영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북한이 사실상의 국가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

○차명진 의원 어떻습니까, 이것 헌법에 위반되는 발언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헌법상으로 분명히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명진 의원 헌법과 위반되는 발언입니다.

물론 총리님께서 헌법과 위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런 반헌법적 발언과 태도도 용인하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굳이 특별하게 끝까지 문제를 삼지 않는 겁니다.

다음, ‘한국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단체와 언론은 대체로 극우보수파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차명진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진보신당은 2008년 3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과 무시로 일관해 온 과거 민주노동당과는 달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진보신당이 극우보수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다음, 박원순 씨는 또 그의 ‘국가보안법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무식한 몰역사적인 발언입니다. 서구 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적어도 자기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소비에트처럼 민주주의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반자유 시장경제적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가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온정적으로 개념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대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몰역사적인 무식의 소치입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계속하시지요.

(웃음소리)

○차명진 의원 제 얘기가 맞으니까 총리님께서

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저보고 계속하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총리님……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박원순 캠프는 ‘시민참여형 민주정부를 함께 운영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참여형 민주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동캠프에 한국진보연대라는 데가 가담되어 있습니다.

한국진보연대의 행동강령은 이렇습니다. ‘진보정당은 한편으로는 의회 투쟁을 전개하고 한편으로는 전선체를 통해 대중 투쟁을 벌여 집권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민중의 분노가 터져 나오는 시기에 전국에서 민중이 벌처럼 들고 일어나 낡은 지배 질서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민중봉기론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차명진 의원 이것은 민중봉기론입니다.

민중봉기론을 주장하는 단체가 소위 시민사회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들과 박원순 후보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광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민중봉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반FTA 투쟁, 반미 투쟁, 반국가보안법 투쟁의 전장이 될 것입니다.

다음 박원순 씨는 아름다운재단이라는 곳을 통해서 그야말로 시민단체라는 성격으로 돈을 모금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겠다라고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모금 출처가 순수치 않습니다.

봐 주십시오.

웬니까? 그야말로 분식회계, 변칙증여, 이런 사회적으로 국민의 이질감을 조장했던 대기업 재벌들로부터 한 손으로는 참여연대가 채찍질해서 받고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아름다운재단이 모금하는 이러한 방식의 모금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모금은 정말로 시민단체로서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양자관계를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그대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차명진 의원 워낙 회계가 불투명해서 정확하

게 전부 다 아귀를 맞출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2005년에 현대자동차 그룹의 변칙 증여 문제를 제기하자 현대자동차는 2005년 아름다운재단에 3억 1800만 원을 집중 기부했습니다. 또 참여연대가 2006년 글로벌비즈의 배임 혐의를 고발하자 현대자동차는 그해 희망제작소에 5억 원을 집중 기부했습니다. 또 참여연대가 2005년 삼성그룹 정·관계 불법자금 제공으로 검찰에 고발하자 삼성그룹에서는 그해 3억 3700만 원을 집중 기부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06년 제일모직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자 제일모직은 그해 아름다운가게에 4억 8000만 원의 현물을 기부했습니다. 이것 인과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그들이 모은 돈을 전부 자선 대상에게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3분의 1은 박원순 씨들의 동지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박원순 씨의 아름다운재단에 공익과 대안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 30% 차지됩니다.

그 공익과 대안의 세부적인 지원 명목을 보겠습니다.

개미스폰서 그리고 공익과 대안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의 혜택을 받은 단체들을 보십시오.

이 단체들은 참여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이들은 다 국가보안법 반대, 해외파병 반대, 노 대통령 탄핵 반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광우병 촛불시위, 다시 말하면 박원순 씨의 동지들입니다. 이들이 적어도 2010년 한 해만 쳐도 아름다운재단, 그리고 희망제작소, 아름다운가게가 모금한 돈 전체의 3분의 1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것 순수한 시민단체의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사실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관계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조금 온당치 않다고 평가될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차명진 의원 총리님, 행사부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감사를 딱 2개 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그리고 희망제작소 그리고 참여연대 이게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박원순 씨를 매개로 해서.

이것을 소위 말하면 연결재무제표를 다 확인해서 정말 순수하게 모금했는지, 순수하게 쓰였는지 감사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오전에도 답을 했습니다마는 행사부에서 필요하다면 모든, 어떤 단체든지 간에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명진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박원순 씨는 시민후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덕목이 없습니다.

시민이란 사전에 의하면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의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으로서의 국민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박원순 씨에게 그 시민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박원순 씨는 첫째, 국가관이 건강치 않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행동강령으로 삼거나 북한을 적극적으로 편드는 자들을 옹호하고, 그들과 함께 행동해 왔고 또 행동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씨와 함께하는 자들, 그들은 시민사회라는 탈을 쓰고 있으나 그들의 행동과 말 하나 하나는 급진 사회주의였던 과거의 제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압니다. 그들이 아무리 문화적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하더라도 그들의 본질은 급진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전복입니다.

박원순 씨는 나는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원순 씨, 당신은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북좌파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박원순 씨가 만약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광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구한 날 반 FTA 투쟁,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국정원 철폐 투쟁, 반미 투쟁으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광장은 좌파의 체제 전복을 위한 투쟁기지가 될 것입니다.

둘째, 박원순 씨의 사업 방식이 투명치 않습니다.

그는 한손으로는 채찍을 들어 재벌들의 썩고 냄새나는 상처를 내리치면서 다른 손으로는 모금함을 내밀어 뺨을 뜯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거야말로 악어와 악어새의 동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난 10년 동안 모금한 928억 중 재벌의 등을 쳐서 모금한 금액이 300억 원가량 됩니다. 이들 중에는 불법 상속 탈세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과 현대 재벌이 있습니다.

박원순 씨는 그들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원순 씨는 스스로를 의적처럼 합리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의적은 빼앗은 돈을 착복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모금한 돈의 상당 부분이 소외된 사람이 아니라 그와 행동을 함께한 그 동지들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해 소비되었습니다.

2010년 한 해만 해도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가 모금한 돈의 30%가 그들 직원들과 좌파단체를 위한 지원용으로 쓰였습니다. 이 돈으로 그들은 외국 유학도 가고 신혼여행도 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서로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왼손 오른손 관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지금 박원순 씨 선거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씨가 이들을 잊는 고리입니다.

박원순 씨의 사업방식은 시민운동이 아니라 저賃거리 양아치의 사업방식에 다름 아닙니다. 그들은 시장경제를 건전하게 감시하는 대신 시장경제에 기생해서 좀먹고 있습니다. 만약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그와 그의 동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서울시 사업을 도리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셋째, 박원순 씨의 사생활은 온통 안개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얼마의 수입을 얻었기에 한달에 250만 원하는 집세, 6억 원가량의 채무 이자비용, 60평 아파트의 관리비, 2대의 3000cc급 승용차 유지비, 자신과 부인의 생활비, 스위스로 유학 간 딸의 생활비, 1년에 두 번 이상 가는 외국 여행 경비를 충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잡아도 한달에 1000만 원 이상은 들어갑니다.

소득이 없는데 한달에 1000만 원 이상을 쓰는 사람, 그는 보통시민이 아닙니다. 조지오웰이 쓴 동물농장이 생각납니다. 게으르고 부도덕한 농장주 존스를 몰아낸 동물들의 우두머리 돼지 나폴레옹은 집권 구호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이 구호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욱 평등하다”로 바뀌었습니다. 박원순 씨와 그의 동지들은 아직 집권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들만이 특별하고 평등합니다. 그래서 박원순 씨는 시민후보가 아닙니다. 그는 특별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차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대전 대덕 출신의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부질문 장에서 흑색선전하고 색깔론 퍼 가지고 선거 운동하는데 그것 주의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전 대덕구 출신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입니다.

지금은 정의화 부의장님께서 사회를 보고 계십니다.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육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총리가 대독한 연설문 중에는 “국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구절도 있었고 또 “저는 8·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의 국정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라는 글귀도 있었습니다.

총리가 이 연설문을 읽어 내려갈 때 저는 아무런 감흥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대통령이라는 주어는 있으되 정작 당사자는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년차에 18대 국회 개원 연설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했지만 그 뒤로는 단 한 차례도 국회에 나오지 않고 3년 연속으로 총리에게 대독을 시켰습니다.

이 대통령이 총리 대독에서 밝혔듯이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라는 중차대한 사안이 걸려 있습니다. 또한 시급한 각종 민생 현안과 총 326조 1000억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바마를 봅시다. FTA 상대국인 오바마는 그동안 미 의회와 국민을 상대로 직접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가져 왔습니다. 자신의 최대 국정 과제 중 하나였던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외국 순방 일정을 미루는 외교적 결례까지 감수하면서

반대파 의원들을 전용기에 태워 대접하며 설득했습니다. 또한 언론 방송에 직접 출연하여 국민에게 호소하고 건강보험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가장 반대가 심했던 민주당의 보커스(Baucus) 상원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식사에 응하고 손을 잡고 애원하다시피 해서 결국은 지지선언을 이끌어 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에 대한 삼고초려는커녕 제18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시정연설조차 총리에게 대독을 시켰습니다. 이 대통령 스스로 소통을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통과 국회 경시를 우리는 또다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국민 방문 하셨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창수 의원 거기서 상·하원 합동연설이 예정되어 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창수 의원 자기 나라 국회에서는 시정연설과 한 해 국가살림에 대한 예산안을 정부가 설명하는 자리에서 총리를 내보내서 대독을 시키는 그런 대통령께서 상하 양원 합동연설…… 물론 참석할 수 있고 연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양국의 정치 문화하고 관련된 문제지만 의원님께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나라도 정치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창수 의원 국회법 제84조1항을 보면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정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는 대통령이 분명합니다.

○김창수 의원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궐위되거나 했을 때 그 대행으로 국무총리가 나올 수 있는 거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물론 궐위된 경우도 있지만 궐위 아닌 경우라도 그때그때 사정이나 형편에

따라서는 총리가 대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 의원 시정연설을 대독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배하고 국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창수 의원 잘못된 관행 아닙니까, 그러면?

○국무총리 김황식 물론 그런 관행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그런 시각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관행이 잘 됐건 잘못됐건 간에 대통령께서 자주 나올 수 있으면 그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김창수 의원 이번 방미에 앞서서 대통령께서 한미 FTA를 국회가 빨리 비준해 달라고 촉구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맞습니다.

○김창수 의원 직접 나와서 설명할 수 없는 겁니까? 꼭 오바마 흉내를 내라는 게 아니고요.

○국무총리 김황식 이번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데, 지금 방미를 앞두고 여러 가지 챙기고 또 준비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출석하시지 못하고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김창수 의원 사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묵과하고 있는, 되풀이하고 있는 우리 국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고 또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상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또 국민에게 보고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에 대해서 실보다 득이 많다는 것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위키리크스 외국 폭로 사이트에 보면 한미통상협상에 관해서는 너무 많은 비밀과 그리고 또 밀실 스토리가 많습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보도에 따르면 현인택 전 통일부장관이 2008년 1월 17일 대통령 인수위 시절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캠프데이비드 방문을 요청하고,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캠프데이비드에서 대통령이

부시를 만나기에 앞서서 쇠고기협상이 일괄 타결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먼저 위키리크스의 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고 더군다나 그것은 불법이 매개가 되어 가지고 지금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런데 떠도는 이야기라고만 일축하지 마시고 결국은 그 말대로 그렇게 됐고, 그것이 촛불시위를, 국민적 저항을 촉발한 겁니다.

그밖에도 김종훈 통상본부장이 미 상원의원을 만나고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쌀 관세 유예 이런 협상 얘기도 합니다마는 이것도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국민들이 왜 정부를 신뢰 못 하느냐,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서 정부가 보완대책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지난 8월 19일 날 21조 1000억에서 지원금이 22조 1000억으로 1조 올랐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창수 의원 그 1조가 뭐니까, 내역이?

○국무총리 김황식 농업경쟁력 제고들을 위해 각종 예산을 더 확충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 보전과 농업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만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김창수 의원 이 자금은 어디서 들어온……

○국무총리 김황식 물론 정부예산이지요.

○김창수 의원 농협에서 1조 원을 빌린 것이지요, 농협에서?

○국무총리 김황식 어쨌든 그렇지만 정부재정뿐만 아니라 농협에서 하더라도……

○김창수 의원 그러니까 정부는 결국은 농협에서 동원한 1조 원에 대한 이자만 지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1조 원을 추가지원한 것으로 진정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정부재정을 통해서 피해대책이라든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의 대책들이 함께 아울러서 보완 강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야·정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있고 또 농식품부 차원에서 총리실을 방문해서 제시한 그런 내용들도 정부 측에서 전향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수 의원 뿐만 아니라 집행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삭감하고, 농민 요구가 많은 시설 현대화 사업 이 예산을 증액하는 이런 내부조정만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농민 지원을 강화한 그런 대목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결국 명백한 조삼모사요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결국은 한·EU FTA의 대책을 재탕 삼탕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완된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면 상당한 보완 대책이 강구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것을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어민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그러한 임시적 호도하는 그런 대책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창수 의원 뭐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여기 자료는 있는데……

○김창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면 농업생산기반 확충, 사료가격 안정,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 이런 농어업 분야 피해 지원에 추가적으로 10조 원을 더 증액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농업지원기본법 제정 그리고 유명무실한 무역조정지원법 개정, 이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가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자유선진당이 농업생산기반 확충, 사료가격 안정성 등 한미 FTA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대책으로 10조 원을 요구하고 또 농업기반 발전사업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농업지원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자는 입장을 자유선진당이 내놨다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반영할 예정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농업 지원에 관해서는 기왕에 별도의 법률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안전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관련 규정들을 보완해서 정책을 추진하면 효과 면에서 자유선진당에서 내놓은 그런 의견과 실효적으로 같을 뿐만 아니라 또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기왕의 법을 이용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창수 의원** 좀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세종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종시가 수정안 파동으로 인해서 여러 건설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고 그리고 정부가 이전할 계획조차도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태에 있고 또 거기에 민간아파트 분양 또 건설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세종시 건설사업 예산이 총 얼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액수는 22조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22조 5000억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창수 의원** 총리님, 세종시 가 보셨어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가 봤습니다.

○**김창수 의원** 몇 번 가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총리 된 뒤로는 한 번 가 봤고 감사원 때도 가 봤습니다.

○**김창수 의원** 지금 공판 짓고 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지금 청사 건립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지금 전체 예산 22조 5000억 중에서 32.5%가 집행됐어요. 그리고 공정률이 한 80%에 머물고 있는데, 작년에 세종시 건설을 위해 편성된 예산 7317억 중에서 집행액이 불과 50%, 반 토막인 3670억에 불과했습니다. 불용액이 무려 1910억에 달했고, 그리고 쓰지 않고 그냥 이월한 예산도 1736억에 이릅니다. 전년도인 2009년도보다 무려 9배나 불용액이 증가한 겁니다.

말하자면 예산을 세워 놓기는 세워 놓았으되 이것을 집행을 안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국회예산정책처가 밝힌 바에 따르면 건설청이 건설하는 데 있어서 집행실적 부진, 사업성과 미흡, 법제도 미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아시다시피 2010년에 집행이 부진했던 것은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된 여파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 원안이 확정된 이상

그것을 어떻게 빨리 예정대로 추진 달성하느냐는 문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모든 공사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일부 민간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혹시 주거 공급에 우려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 최근에 굉장히 분양 열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LH로서는 일단 사업에서 포기하고 물러났던 건설사들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 만약 그게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또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

○**김창수 의원** 총리 말씀을 들어 보면 굉장히 지금 잘되고 있는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LH 토지구택공사가 2005년부터 2015년, 10년 사이에 6조 1537억 이것을 1단계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많이 삭감이 됐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LH공사의 채무과다 문제, 경영 정상화 문제 때문에 지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창수 의원** 뿐만 아니라 그런……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세종시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에 있어서 그런 주름살이 있었습니다.

○**김창수 의원** LH가 내부적인 어떤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시청사, 세종시청사 행정지원센터의 경우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직업전환교육도 38.7%에 불과해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내년도부터 이전하고 또 여러 가지 자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소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관련해서 출발은 좀 지연됐지만 틀림없이 걱정 안 하시도록 이렇게 정부로서는 챙겨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창수 의원** 지금 거기에 공무원이나 민간인 포함해서 한 2만 호 정도 주택이 필요하지요?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숫자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가셔도 확인하고 그 뒤로…… 세종시지원단이 총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단으로부터 늘 보고를 받고 챙기고 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도 관심이 많아져 가지고 분양도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과열될 정도

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들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 의원** 지금 민간업체가 사업 포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민간주택 수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용지도 지금 재매각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것을 공동주택용지 매각이 어려울 경우에, 민간 매각이 어려울 경우에 LH에서 직접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러니까 사업 포기했던 건설사들로 하여금 이제는 많은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다시 사업을 하도록 LH에서 권장하고 있고, 또 만약 그런 건설사들이 끝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LH가 특단의 조치로서 직접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말에 많은 분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분양 열기가 상당히 지금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모든 상황의 전개가 낙관적인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총리께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인프라 조성과 함께 또 세종시는 시장, 교육감 또 경찰청 설치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국회의원의 독립 선거구를 신설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거기에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세종특별자치시가 되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 그리고 또 교육청도 따로 넣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 등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적인,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또 내년 4월에는 관련 선거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작업을 세종시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창수 의원** 과학벨트 조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과학벨트 예산이 반 토막 난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과학벨트사업을 교과부에서 요청한 사업 중에서 일부가 일정이 조정됨에 따

라서 국과위 심의 결과 좀 조정이 된 것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2017년까지 진행되는 사업 전체에는 지장이 없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거기 부지매입비가 반영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부지매입비는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창수 의원** 올 연말이면, 벌써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 기초과학연구원장도 임명하고 연구원 데스크포스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정해진 사업인데 그게 차질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부를 신뢰해 주시면 모든 것이 내부적으로 착착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예산이 벌써 이미 내년에도 수천억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창수 의원**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권재진** 법무부장관입니다.

○**김창수 의원** 합동수사단 그게 설치된 게 언제입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저축은행 관련 말씀……

○**김창수 의원** 예.

○**법무부장관 권재진** 저축은행 관련, 지금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창수 의원** 날짜는 모르고 계세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김창수 의원** 지난 5일 발족식을 했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김창수 의원** 그래서 지금 수사대상으로 영업정지된 일곱 군데 중에서 다섯 곳, 영업정지에서 제외된 곳 여섯 곳 이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개별 저축은행에서 하는 것도 합수단에서 총괄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김창수 의원** 이것 너무 늦게 설치하고 또 너무 늦게 칼을 댄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다 불법 대출해서 빠져나가고 횡령하고 도피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검찰 수사가 너무 뒷북 수사 아니에요, 이것?

○**법무부장관 권재진** 금융당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검찰도 필요한 적기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수사 적기에 했다?

제가 볼 때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그런 수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들어주세요.

행안부장관 나오십시오.

지난번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해 가지고 새마을금고에 거의 지금 2조 5000억이나 빠져나가고 그랬다는데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행안부가 지금 주무부처지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예, 지금 당초 발언이 나온 날 인출, 그다음 그 이튿날 인출이 제일 많았고요. 어제하고 오늘 해 가지고 지금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인출 상황을 보니까 어제까지 인출한 금액의 한 3분의 1 정도 인출되고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금융위원장이 이런 얼빠진 발언을 해 가지고 많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그다음에 예금주들한테도 혼란을 가중시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하고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새마을금고는 상호협동조합의 회원들에 의해서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주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저축은행과 다르고, 또 그다음에 저축은행에서 하고 있는 부실의 원인이 됐던 PF 대출이 새마을금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이고, 각종 지표를 보면 연체율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처음에는 불안하게 생각했다가 지금은 사실 21일까지 해약을 취소하면 우리가 이자 손실까지도 안 당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들어가십시오.

이제 18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18대 국회는 양당 독식 구도가 아니라 의회민주주의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치를 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오늘 지금 이 회의를 전 국민이 보고 계시는데 새마을금고가 가장 안전한 금융기관이라는 것을 오늘 답변의 기회가 있으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를 출신의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강서를 김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의가 향후 정부의 새로운 정책 변화에 소중한 단초가 되길 기대하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 최근 미국의 월가 시위가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이었던 월가는 구제금융을 받자마자 2011년, 그러니까 올해 뉴욕 댈론은행 CEO 1인에게 퇴직금을 무려 200억을 지급했습니다.

폴드만삭스 CEO와 사장에게는 연말보너스로 약 300억씩 지급을 했습니다. 한 해에만 5명의 임원에게 900억이 넘는 고액 보너스를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미국 경제의 중심지인 월가에서도 불평등, 그리고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에 따른 불만이 표출된 것입니다.

시위대들은 매일 미국의 최고부자 1%가 미국 전체 부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빵값 걱정하고 그리고 끼니 걱정하지 않게 해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사건이 무엇을 시사한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자본주의가 시장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전체 구성원이 함께 잘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탐욕에 빠져 가지고 자기들 이익 챙기기에 급급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곤궁에 몰리거나 박탈감을 느끼는, 이런 사회통합의 면에서 큰 저해 요인을 제공했고 그것이 사회발전이나 사회통합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또 우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 의원** 총리는 정말 현실을 잘 직시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 사건은 형평성과 사회적 균형을 잃어버린 경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총리,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상황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은행과 대기업의 극단적이기주의는 기업이 사회적 차별만 양산하는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삼성전자 이사 1명의 연봉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삼성전자 임원, 이사 1명이 1년에 얼마씩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잘 모르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성태 의원 76억 4000만 원입니다.

비정규직 평균 급여가 월 134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임원 한 사람이 76억 4000만 원을 받으니까 무려 475배나 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을 삼성전자 임원 한 사람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별화된 정말 형편없는 사회가 대한민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총리,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액 연봉은 어찌면 샐러리맨의 희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주 이윤 극대화화 임직원 그들만의 돈 잔치로 끝나 버린다면 이제 부러움을 넘어서 적대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렵고 문제 생기고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사회로 돌린 채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기 때문인데, 이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숫자적으로는 김 의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경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정책의 하나에 터 잡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순수한 개인 급여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혹시 업무추진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적어

도 피상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그러한 문제들이 좀 국민들이 납득하는 수준에서 해결되는 방향, 그렇기 때문에 오전의 질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나눔과 기부의 배려의 문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 다가오는 문제라 생각하고 또 아시다시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총리, 헌법의 제119조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해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성태 의원 결국 정부가 헌법 제119조에 따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회의 엄청난 불평등과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의 총리 답변대로 기업의 경영 관리자가 정말 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성과를 위해서 얼마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 노력의 대가는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무려 475명의 급여를 한 사람의 임원이 받는다면 이걸 너무나 불평등한 사회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총리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능력 있고 성과가 뛰어난 사람이 고액연봉을 받는다, 나는 그걸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어도 일상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의 급여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경우는 전자보다도 후자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 문제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또 서민을 배려하는 그러한 정책을 세우느냐가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 조금 전에 우리 국회의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서민들의 돈을 맡긴 저축은행은 언제 쓰러질까 걱정인데 지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총재는 매년 4억 3000만 원의 돈을 받습니다. 또 수출입은행장도 4억

30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도 3억이 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기업은행이 3억 2000만 원, 산업은행이 2억 9000만 원의 성과급을 챙겼습니다.

총리,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하늘 아래 탄 세상 이야기가 지금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 빨리 정부가 사회갈등의 근원인 양극화 해결에 앞장서는 데 총리께서 일단 정부의 이런 공공기관의 장……

어떤 산업은행 총재, 한국은행의 총재는 4억대 5억대를 받고 제가 아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공기업 이사장인데도 연봉이 1억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도 엄청난 정부 공공기관 조직 내에서도 지금 차별이,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정하실 용의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하나로써 CEO들의 급여 수준을 낮추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래도 이만한……

○**김성태 의원** 많이 줄였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고, 또 한편으로는 금융 부분이 특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금융이라는 것은 또 세계금융과 항상 서로 맞서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 많이 받느냐 문제보다도 어떻게 하면 밑에를 받쳐서 올리느냐 하는 쪽으로 하여튼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위의 분들 걸 끌어내린다고 해 가지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김성태 의원** 그런 측면에서 금융 공기업 초임 직원들 임금 삭감하는 것 원상회복하기로 한 거였지요? 그건 정부가 저는 대단히 잘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정책의 오류는 가져가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조금 전의 총리 답변하고 좀 다른 정책의 입안 내용이거든요.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공기업 선진화 초기에 좀 비용은 줄여야 되겠고 또 기왕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 걸 함부로 줄일 수는 없으니까 편법적으

로 좀 신입사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급여를 이렇게 삭감을 했던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그 내부적인 균형 문제가 당장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김성태 의원** 그래서 이번에 바로잡은 거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자연스럽게 하여튼 바로잡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 총리님,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처한 상황을 지금 그래도 총리님은 많은 관료들 중에서 많이 알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인천공항공사를 국정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정부 파견 공무원이 약 3000여 명이 있고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 약 866명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전체 근무하는 인원은 약 3만 5000명인데 이분들이 약 10%에 해당됩니다.

인천공항공사 하면 인천공항 체육 운동장 있는데 그 앞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저는 놀란 사실이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상은 한마디로 3000명의 정부 파견 공무원들 자녀들만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약 3만 명에 달하는 이 비정규 아웃소싱 근로자들은 그 어린이집에 그 자식을 맡길 수도 없었습니다.

총리,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이러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자식만 자식이고 비정규직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까? 이런 차별은 정부가 단호한 의지만 가져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총리, 정부 산하 공공기관 및 공기업부터 모든 차별적 복지를 해소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또 요구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인천공항공사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은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법 정신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비정규 대책을 많이 내놓았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하여튼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계속해서 시정하고 또 그런 것을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더 챙기도록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공항공사는 또 직원들한테 따로 보육수당을 지급한다

든지 좀 특수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도 함께 더불어서 여하튼 차별 없이, 할 수 있는 한은 그렇게 함께 차별 없이 이용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모든 부분에서 유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천 공항공사 직원들은 그나마 보육수당이라도 받습니다, 17만 원에서 30만 원. 하지만 인천공항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하는 아줌마 그리고 점원들, 기능공들 그 많은 아웃소싱 비정규직 근로자들 어린이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제 이거 해결하겠다고 국토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차별 해소해 달라는 거고요.

지난달 저는 한나라당 비정규대책특위 위원장으로서 비정규종합대책을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의 차이를 없애고 명절 떡값 그리고 앞으로 상여금, 복리후생의 차이를 없애고 또 영세사업장이라도 사회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그런 영세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 이제 지원하기로 정부가 대책을 밝혔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 이것은 한마디로 DJ 정부, 노무현 정부, 흔히 말하는 친노동자 정부라는 그 정부에서도 해내지 못했던 일입니다.

보다 전향적인 비정규 대책을 총리께서는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해 나갈 뿐만 아니라 특히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고용보험이라든지 또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가입률이 낮은 영세근로자 비정규직을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으로 그것을 지급하는 그런 방안을 포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발표한 비정규 대책에 따라서 부문별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금년 말까지 가능한 모든 조치는 내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에 대해서 근로자 측에서는 미흡하다 또 사용자 측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러한 정부의 중간에 낀 입장이 있습니까 마는 그러나 정부가 모든 현실을 감안하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총리님, 경제활동인구 1700만 중

에 850만이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비정규직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비정규 문제는 방치한 채 정치권은 무상 복지료, 아니 돈으로 지금 때우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비정규 문제가 웬만큼 해결되면 복지문제도 한결 수월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경제활동 현장에서 이 소득 불평등이 줄어들면 무조건식 복지비용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정치권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보편적 복지 그리고 선별적 복지는 앞으로 절충점이 찾아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총리도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습니다.

좋은 일자리 또 반듯한 자리, 정규직으로 차별 없는 자리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복지의 주요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 의원 1982년도 네덜란드에서 바르셀로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노사정이 체결해서 한마디로 이런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총리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주도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근본적으로 노사정을 포함한 사회적인 대타협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그러나 그게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정책을 마련해서 수행을 해 나갑니다마는 그러한 방법이 근본적으로 기본 정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총리님, 비정규직의 임금·근로조건의 차별을 해소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까마는 경영 성과급의 혜택을 고루 확대시켜서 차별을 해소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까 비정규직이 근로자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명확히 해 두고 싶은 것은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중에서 자발적으로 또 사정에 의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더 적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

규직이든지 비정규직이든지 서로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용자 측의 태도도 문제지만 정규직 노동조합 근로자 쪽에서 말하자면 비정규직을 끌어안고 배려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용자 특히 정규직 근로자 및 그것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그런 점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해결에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김성태 의원** 총리, 이제 다른 질문입니다.

현재 야당은 정당 본연의 색채나 특징은 온 데 간 데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이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제1 야당이 서울시장 후보자를 공천하지 못하는 불임 정당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정당이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고 이제 무소속 후보자의 들러리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러한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정당의 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가, 제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연 정당 현행 시스템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었기에 이와 같은 일이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이걸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정당정치가 국민의 요구 수준에 맞게 변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따른 별어진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 의원**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기본은 또 후보자를 공천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최근 야당의 정치 행태를 보면 무소속을 비롯한 이합집산한 그런 정당끼리 야권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박노현 교육감 사태를 보더라도 겉으로는 후보 단일화이고 뒤에서는 돈이 오가는 매관매직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이 막가파식 후보 단일화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정당이 제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만약 정당이 후보자 공천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이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고보조금을 축내는 허울뿐인 허수아비 정당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정당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만약 이 국고보조금 정치자금의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적절히 알아서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 조금 전 답변에서도 밝혔습니다. 마는 정치자금법 제28조제1항은 국고보조금을 무소속 후보자에게 대여 혹은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사실관계야 어떻든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다루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 단일화 과정에서 지원된 민주당의 신고 금액과 지금까지 박원순 후보를 위해서 쓴 비용 그리고 선거 종료 시까지 쓰인 모든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국민의 소중한 혈세인 국고보조금이 위법적으로 무소속 후보자를 위해서 쓰여졌는지 철저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아까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적인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 그리고 그것이 범죄에까지 이르는 것이라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 총리님, 론스타라는 이 외국계 기업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성태 의원** 외환 위기를 틈타서 경영이 힘들어진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해서 시세차익을 챙겨 떠나려 했던 전형적인 이른바 먹튀 기업입니다. 아시지요?

2010년 11월 발표된 한화금융과 론스타 간의 주식매매계약 내용을 보니까 론스타가 가져갈 매각 차익만 무려 5조입니다, 5조.

이런 론스타에게 아름다운재단인지 무슨 시민

단체인지 여기가 박원순 후보를 위한 이익단체인지 저는 심각한 의심이 듭니다. 이 단체가 론스타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그것도 한 푼, 두 푼도 아니에요.

1조 4000을 받아서 9000억은 쓰고……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성태 의원 1억 4000만 원을 받아서 그리고 9000만 원 쓰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이제 돌려줬어요. 이게 제대로 된 시민사회단체였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사실관계나 또 그렇게 된 연유 이런 것을 더 정확히 따져 봐야 뭐라고 말씀드릴 문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이 박원순 후보는 지난 2006년도에 내부 비리를 고발한 회계 책임자를 해고해 버렸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을 보이자 만약 노조가 생기면 그것은 아름다운 가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노동3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진정 인권 변호사였는지 사회운동가가 될 수 있었는지조차 의문이 듭니다.

총리, 대한민국에서 노조 설립의 자유를 막는 것이 가능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노조 설립은 자유입니다.

○김성태 의원 또 그렇게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장이라는 공직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러한 사실관계나 경위를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여하튼 신문에서 저도 그런 내용은 잘 보고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온당치 않다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김성태 의원 박원순 후보는 병역 면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1941년 박 후보 할아버지에 대한 일제 징용영장이 집으로 날아왔고 이를 동생인 작은 할아버지가 사할린에 대신 징용 갔다 이렇게 주장했지요, 그렇지요?

오전에 우리 신지호 의원이 정론관에서 밝혔습니다마는 일본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인 징용을 실시한 것은 1944년도부터였습니다.

(판결문을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41년도에 징용을 갔다는 것은, 이것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이번 부산고등법원 이 판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관이었던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 사실관계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전에 아마 그런 발표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국회에 있는 바람에 전혀 그런 사실관계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김성태 의원 시간이 모자라서, 시간이 1초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하남 출신의 민주당 문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진 의원 오늘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들어 보니까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네요. 우리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박원순 후보 혈투기에만 골몰들을 하고 계시네요.

방금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이 제1야당 후보, 서울시장 후보 못 낸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크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야권의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다!

한나라당은 이 거대한 흐름을 잘 보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경기 하남 출신 문학진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문학진 의원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 이후 16차례의 개각을 통해서 총 50명의 총리 및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 기록을 분석해 보면 총 57명의 총리 및 장관후보자 가운데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표절, 병역기피, 위장전입 등 주요 의혹이 2건 이상인 후보자가 무려 46명이고, 의혹이 1건인 후보자가 6명, 의혹 없는 후보자는 겨우 5명이었습니다.

총리, 이명박 정권은 부도덕한 사람들의 집합소입니까?

이것 뭘니까?

이러고도 이 정권이 대통령 말씀처럼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이 정부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진 의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참 부끄럽다 이런 취지로 청와대 간부회의에서……

○**문학진 의원** 제가 알기에는 대통령께서는 한 점 부끄럼 없는 도덕적으로 퍼펙트한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이,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부도덕한 인사의 특징이 대부분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다운계약서 작성, 편법·불법 증여 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사저가 한심하게도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총리, 대통령 퇴임 후 사저를 아들 명의로 구입한 전례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문학진 의원** 없어요.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반드시 매매당사자의 실제 이름으로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사저로 사용될 부지를 차명으로 매입한 것은 명백한 부동산실명제 위반입니다. 총리, 그렇지 않아요?

○**국무총리 김황식** 실명제법 위반이 되려면 그 명의를 실질적으로 내 소유인데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리고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할 때에……

○**문학진 의원** 지금 아들 이름으로 했잖아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데 지금 현재 아들 명의를 빌렸다가보다도 아들 이름으로 사서 정리를 하고 그걸 나중에……

○**문학진 의원** 참 복잡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셈법이 복잡하고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느라고 또 얼마나 머리 속이 복잡하시겠어요?

○**국무총리 김황식** 아닙니다.

○**문학진 의원** 청와대는 아들 이시형 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 받고 이자를 직접 내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그러니까……

○**문학진 의원** 아니, 어느 누가 말이에요……

봐요. 2008년에 아들 이시형이가 전채산이 신고된 게 3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직장에 다니지 3년밖에 안 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말이에요, 지금 11억 2000만 원의 원금과 매달 이자 500만 원 이것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볼 사람 어디 있어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부동산실명제 위반이고 사실상의 편법 증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설명할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진 의원** 예, 해 보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러니까 아들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계약의 주체가 아들이고 그 자금 조달이 아들 이름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실제적인 내용과 다른 내용이, 만약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마는 지금 상태에서 실명제법 위반이다 아니다, 또는 편법 증여다 하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문학진 의원** 조사하면 다 나오지요? 좋아요.

그다음에 또 어제 국회에서, 국회 운영위에서 거론이 됐던데 다운계약서 작성했다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에 거래가가 확인된 내곡동 20-30번지의 이시형 지분에 대한 공시지가는 5364만 원이에요. 그런데 신고액은 2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20-36번지의 경우도 공시지가는 1억 2513만 원이에요. 그런데 신고금액은 802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시지가의 40~60% 수준으로 부지를 매입했다는 것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거지요. 어때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다운계약서라는 것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운계약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실제로 거래했던 계약하고, 실제로 거래했던 내용하고 그대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다만 공시지가하고 관련해서 문제가 됐을 때 그 위에 있는, 지상에 있는 노후된 건물, 좀 헐어 버릴 그런 건물을 포함시키면, 그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그런 점은, 그 점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일부 오해하고 있는 시각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거래가격대로 계약을 작성했다, 그리고 그것이 공시지가……

○**문학진 의원** 그것 사실이에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것은 뭐……

○**문학진 의원** 아니,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조사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문학진 의원** 제가 총리께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서울에서 공시지가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가격으로, 반값으로 땅을 샀다고 그러면 어느 국민이 믿겠어요? 그런 땅 어디 있어요? 그것 소개 좀 해 주세요. 정확히 조사를 하고 말씀을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시형이가 5억 2000만 원을 친척들한테 차용증 쓰고 이자도 주는 조건으로 빌렸다고 청와대는 밝혔어요. 친척 누구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관계는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친척이 누구인지 하는 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문학진 의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대통령 명의로 이전을 하겠다’ 청와대에서 오늘 밝혔잖아요? 총리, 사저를 가지고 이렇게 불투명하고 복잡하게 일을 추진한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국무총리 김황식** 그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하게 보이실 텐데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이것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사저이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가격 결정의 문제라든지 생기기 때문에 우선 아들 이름으로 취득을 해 가지고 이것이 공개돼도 괜찮을 시점에 대통령 이름으로 다시 취득하겠다 하는 이런 과정에……

○**문학진 의원** 그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게 복잡한 게 아니고 심플하지요.

○**문학진 의원** 봐요. 대통령 사저는 국고지원사업 아니에요?

○**국무총리 김황식** 사저는 그렇지 않지요. 경호……

○**문학진 의원** 아니, 국고가……

하여튼 그것도 포함해서요.

○**국무총리 김황식** 경호시설이 그렇지요.

○**문학진 의원** 그럼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

쳐서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아들을 끼워 넣고, 이것은 정부 예산 집행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다음에 김해 봉하에 있는 고 노무현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그다음에 나경원 지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이런 사람들이 ‘아방궁’이라고 그랬었지요, 기억하시지요? 아방궁이라고 그랬다고, 호화롭다고.

그런데 이 대통령 사저는 봉하의 노무현 대통령 사저보다 부지매입비 16.5배, 총건립비용 3배 이렇게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나는 홍준표 대표, 나경원 후보 이 사람들 지금 아방궁 아니라 뭐라고 그럴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에 현재까지만 해도 측근 및 친인척 중에 각종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추부길·천신일 등 3명, 구속된 사람이 은진수·김두우 등 6명, 불구속기소 김해수 등 4명, 검찰수사 중인 사람이 대통령 사촌형 등 8명, 구체적 의혹에 휩싸인 사람 박영준 등 6명이예요.

이 정도 되면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국민한테 좀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 김황식**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예산 집행에 아들을 끼워 넣었다 하시는 그 말씀과 관련해서는 사저 부분은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들을 끼워 넣든 누구를 끼워 넣든 그것은 별도의 문제고요.

경호시설에 관해서는 아마 국가가 당사자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 아들을 끼워 넣었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소위……

○**문학진 의원** 측근·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대통령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되는데 창피스럽다” 하는 말씀을 누차 참모들에게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학진 의원**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라고 딱 끊어서 얘기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그 이야기는……

○**문학진 의원** 그런데 그 후에 자꾸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창피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모양이라……

○**국무총리 김황식**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한 것은 우선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일체의 불법적인 자금을 기업으로부터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없었다 하는 생각에서 아마 우리는……

○**문학진 의원** BBK가 도덕적으로 완벽했다고 총리, 지금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제가 사실관계를 모르고 일단……

○**문학진 의원** 재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일단 그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특별검사까지를 통해서 처리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진 의원** 자, 총리 잠시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예.

○**문학진 의원**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권 장관, SLS그룹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국철 회장이 신재민, 박영준 등에 대해서 금품·향응 제공 폭로했을 때 권 장관께서는 9월 29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일축을 했어요.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도 하기 전에 폭로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 얘기를 단정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저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의혹을 폭로했는데 저는 그에 관련해서 권력형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실을 명백히 밝히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자간담회는 기자들하고 상견례를 겸한 자리였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과연 그 의혹에 연루가 돼 있느냐’ 그것을 해명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제가 검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하지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일말의, 추호의 오해도 없도록 더 유념하겠습니다.

○**문학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그날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멸절한 기업도 많은데 워크아웃 상태의 회사에 접대를 요구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국철 회장의 각종 진술을 보면 접대 내지는 금품 제공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다 확인이 되겠지만 술하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장관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장관으로서.

○**법무부장관 권재진** 제가 그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한 것은 저한테 대해서 기획수사를 했는지 저에 대한 의혹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제 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신빙성에 의문을 표시를 했던 겁니다.

○**문학진 의원** 권 장관한테도 이국철 회장이 ‘대구 지역의 모 인사를 통해서 로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받을 부분이 있으면 받겠다’ 말씀하셨지요, 장관?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 제기한 의혹이 근거가 있고 제가 조사받을…… 제가 밝혔습니다마는, 국감장에서 밝혔습니다마는 근거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도 성역 없이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학진 의원** 성역은 없어야 되지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한 조현오 경찰청장, 엇그제 국감에서도 내가 물어봤는데 이것 검찰이 지금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있잖아요? 서면조사 두 번밖에 안 했지요? 이런 검찰이 법무부장관과 얽힌 그런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겠느냐 이런 의혹들을 가져요. 의심들을 해요,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검찰에서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서 성역 없고 철저하고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고 제 스스로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검찰에서 일체의 고려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의원** 지금 장관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시고요.

총리 다시 나오시지요.

민간인 불법사찰 기억하시지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문학진 의원** 그때 핵심 실무자였던 원충연 전 사무관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문학진 의원** 기억하시지요?

이 사람이 이 불법사찰 혐의로 8개월 복역을

하고 지난 7월 14일 날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쯤 지나서 9월 24일 날 서울북부고용센터 기업 지원2과장으로 복귀했어요.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문학진 의원 처음 들으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문학진 의원 우리 다 확인한 거고요.

이게 지금 이 사건이 대법원에 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대법원 확정판결이 지금 나기 전인데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이런 과립치한 행위를 하고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한 두어 달 만에 현직에 복귀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대법원 판결 끝나고 조치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저……

○문학진 의원 이것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이명박 정권이 비호한다고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러면서 어떻게 공정사회를 이 정권이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국무총리 김황식 법률적으로는 흠결은 없지만, 판결이 확정 전이니까 흠결은 없지만 지금 들은 내용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어떤 경위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문학진 의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이게 악취가 많이 나요, 악취가, 아주 고약한 냄새가.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이요, 4400억 투자했어요. 그런데 원유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게 쿠르드 대박이 쿠르드 쪽박이다 그래요, 지금.

그다음에 이라크 바스라 지역 유전 개발, 이것 구체적인 합의 없이 실익은 상태로 발표됐다 밝혀졌어요.

그다음에 2009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지요,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이것 양국이 이미 한 달 전에 합의했던 거예요. 그것을 이명박 대통령 아랍에미리트 방문 시기에 맞춰서 일정을 조정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면합의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군사협력 이면합의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뭐 이렇게 국민을 속입니까, 부풀리고? 이게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모습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우선 쿠르드 자원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결과가 도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지급된 돈은 다 날린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적어도 손해가 나지 않는 각종 담보장치들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관련해서는 원전 수주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진 의원 아니, 그런데 그걸 발표시점을 그렇게 조정을 했다 이거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발표 시점을……

○문학진 의원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면합의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사 협력하기로 이면합의를 했잖아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지난번……

○문학진 의원 그런데 우리 군을 이런 데다가 말하자면 써먹는 게 이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작년 국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대 파견을 조건으로 해서 그러한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 갖고는 조건관계는 아니고 별도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게 사실관계일 겁니다. 그리고 물론 한 나라하고 한 나라 사이에 경제적 협력, 다른 협력이 서로간에 오고가는 그런 사정들이 또 일각에서는 마치 조건적인 연결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학진 의원 제가 총리께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이런 자원외교라는 미명하에 무슨 어떤 이면합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가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러니까 이면합의를 그런 조건으로 했다고 한다면 적절치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하고 제가 동감입니다.

○문학진 의원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럼요.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학진 의원 그다음에 자원외교 뺨튀기 홍보의 당시 책임자가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어

요. 지금은 이 사람이 대통령 언론특보로 있는데 해임 건의할 생각 없어요?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의 사실관계가 우선 조금 견해가 다르고요. 또 청와대 참모에 대해서 총리가 이렇게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문학진 의원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이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문학진 의원 그러면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고 강도 높은 감사가 필요하 다 이렇게 보는데, 그 필요성 안 느끼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문학진 의원 아직…… 그것 빨리 해야지요. 언제 하려고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감사원장으로 있을 때 도 일부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원 개발이라는 것은 장기간이 걸리고 또 상당 부분은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대박이 터질 수도 있고……

○문학진 의원 쪽박이 될 수도 있고?

○국무총리 김황식 그냥 쪽박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광구가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사기적이다 또는 어떤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전체 적으로 보고 그걸 투자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적법한 프로세스를 거치고 얼마큼 신중한 절차를 거쳤느냐가 중요한 거지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은 차후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투자가 됐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그런 내용을 밝힐 겁니다.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도 어 디 한 광구에 대한 투자 과정에 있어서 조금 의 사결정 절차가 너무 가벼웠다 하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학진 의원 들어가시고요.

법무부장관 다시 나와 주세요.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문학진 의원 이게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이 카메룬 정부에 C&K에 대한 다이아몬드 개발 권을 요청을 했고 죽 이런 경과가 있는데 이게 총리실하고 외교부가 전폭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C&K란 회사의 고문으로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이 거기 가 계시네요. 그다음에 주식도 이 사람이 보유 중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니고 이 주가조작에 총리실과 외교부가 개입된 권력형 비리 아닌가요? 어떻게 보고 계시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주가조작이 됐냐 안 됐냐 이걸 둘러싼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 당국인 금융감독원에서 현재 검사 중에 있고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감독기관에서 검사 또는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학진 의원 권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이 건 대통령한테 보고했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제가 현재 민정수석을 떠난 신분입니다. 그런데 재직 중에 어떤 부분이 보고가 되고 보고가 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문학진 의원 적절치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의원 자, 봐요. 이게 진상을 파악해서……

이 주가조작에 제가 알고 있기에 총리실, 외교부 직원 여럿이 연루가 돼 있고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국민 앞에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그렇습니다.

○문학진 의원 이것 언제 수사 착수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지금 현재 수사를 착수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금융감독기관에서 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거나 감사 준비 중에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와 봐야 검찰수사 착수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다만 제가 민정수석 재직할 때에는 민정수석실이라는 데가 의원님 아시다시피 조사권이 없습니다. 의혹 제기한 그런 현황만 파악했을 뿐입니다.

○문학진 의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 다시 나와 주시지요.

보금자리주택사업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문학진 의원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으로 친서민정책이다 이렇게 대국민 홍보를 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오히려 전·월세 대란을 부추기고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LH공사가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명분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땅을 헐값으로 사들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3, 4억 원의 분양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서민을 상대로 한 집장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총리께서는…… 제 지역구인……

보금자리주택이 제 지역에 많습디다, 지금 지정된 데가. 하남감일지구 등 토지수용 대상 주민들이 공정 보상을 요구하면서 지장물 조사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 반발 때문에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것 보고 받으셨어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 지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지는 못 했지만 제가 보상에 관한 다툼으로 인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감사원에서서도 관련된 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여하튼 주택공사 등의 사업 진행에 있어서 보상이 정말 턱없이 부풀려서 협잡의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여하튼 분양가에 반영이 된다 해 가지고 보상을 정확히 감정평가를 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내려고 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바탕 위에서 신중하게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학진 의원 이게요, 주민들 요구는 간단해요. 제가 뭐 수시로 만나는데 국가보상법에 명시된 대로 현실 지목과 시세를 반영한 정당한 보상을 해 달라 이거예요.

판것 아닙니다. 판것 아닌데 이게 하남미사지구 같은 경우 보면요, 실제 거래가의 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평가를 하고 재산세 과표 금액보다도 훨씬 적게 보상가를 책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하면 총리라면 동의하시겠어요?

○국무총리 김황식 보상이야 정당보상이 원칙이니까 정확히 평가된 실제 가격대로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보상받는 쪽하고 하는 쪽하고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법원에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따라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정당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문학진 의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문학진 의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전면 재조사 실시할 의향 없으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LH공사, 지금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그런 문제를 더 한번 챙겨서 혹시 정당한 보상에 지장 있는 방식으로 지금 업무가 진행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진 의원 개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문학진 의원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초 남았네.

○부의장 정의화 쓰시지요.

○문학진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부의장 정의화 문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금천 출신의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금천구 출신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8대 국회의 4년을 총 결산하는 이번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이 우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는 것이 편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이면 오늘보다 낫겠지 하고 열심히 일해 보지만 뭔가 안타깝고 불안하다고 하십니다.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경제를 살리겠다, 서민정책 복지정책 달콤한 얘기를 쏟아냅니다. 그러나 뭔가 와 닿지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나오는 상관없는 메아리라고 느끼십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정치권이 안타깝다고 걱정입니다. 정치권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권을 걱정하는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정당이 아닌 시민단체 후

보가 서울시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묘한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전혀 검증받지 않은 후보가 나와서 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묻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박원순 후보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본회의장에 오기 30분 전에 정말 시간이 남아서 우연히 박원순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저는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박원순 후보, 참 시민운동 잘했습니다. 그런데 경력·학력 관리도 기가 막힙니다. 가히 신의 경력, 신의 학력입니다. 기업체에서 도움받는 데도 프로였습니다. 경력 관리도 프로였습니다.

자, 이런 경력이 있습니다.

박원순 후보 1979년에서 85년까지 '단국대학교 사학과 입학, 졸업'이라고 공식 홈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경력'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학교는 79년부터 85년까지 대학을 다녔는데 78년 12월부터 79년 8월까지 춘천지법 정선등기소 소장입니다. 즉 단국대학교 사학과 입학할 때 이 분은 정선등기소 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년도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또 분명히 본인이 말한 79년부터 85년 사이에 단국대학교 사학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81년에서 82년까지 사법연수원을 다녔다고 합니다. 또 82년 8월에서 83년 8월까지 대구지검 검사였습니다. 이때도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83년에 변호사를 개업했습니다. 미스터리입니다.

총리, 79년에서 85년까지 단국대학교 사학과를 입학하고 졸업했다고 하는데, 상식선에서 볼 때 그 기간에 춘천지법 정선등기소 소장을 할 수 있으며, 사법연수원 몇 년입니까? 2년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안형환 의원 2년을 할 수 있으며, 대구지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습니까? 상식선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형환 의원 미스터리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안형환 의원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박

원순 후보가 허위로 선관위에 약력을 등록했다 아니면 단국대학교에서 학력 관리를 정말 사기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단국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것보다도 이런 공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또 시민들이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안형환 의원 사법연수원 다니면서 대구지검 검사가 대학을 다닐 수가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검사가 다닐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요.

○안형환 의원 만일 다닌다면 법 위반이지요, 규정 위반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공무원이 학교 다니면서 공무원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안형환 의원 어렵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안형환 의원 그런데 이분은 참 뛰어난 능력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정선 지방 정선등기소 소장, 정선서 서울 나오기가 이 당시 얼마나 어렵습니까? 학교 다니면서 소장도 했습니다. 검사도 했습니다. 연수원도 다녔습니다.

뭔가 약취가 나옵니다. 약취가 나오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취가 나오는 학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의혹투성이의 후보가 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박원순 후보 가족사 정말 논란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태 의원께서 말씀을 일부 하셨습니다마는 김성태 의원이 남긴 자료를 보니까 정말 여기도 엉망입니다, 이 양반.

일제의 인력동원, 강제징용은 학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9년에서 41년까지는 기업체에서 모집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조선총독부가 알선한 것은 보통 42년에서 43년, 영장 영서, 지금 식으로 말하면 영장에 의한 징용은 44년부터 이후에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박원순 후보 측이 주장하는 '41년에 강제징용 영장이 집으로 날아왔고 이 때문에 일제에 징용됐다'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양보해 준다면 아마 본인이 기업체 모집에 응해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작은 할아버지가 일제 징용을 갔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기입

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사실 관계가 정확히 밝혀지면 그에 따라서 평가와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형환 의원 저는 사실 이 논란이, 박 후보의 입양이, 논란이 되고 있는 입양이 박 후보 형제의 병역 면탈을 노린 반사회적 호적 쪼개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자연스럽게 지금 서로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안형환 의원 정말 검은 냄새, 검은 그림자, 악취가 풍겨 나옵니다. 이렇게 과거가 불투명하고 약력이 불투명하고 경력이 불투명한 그런 후보가 서울시정을 맡겠다는 세상, 정말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좌파와 진보단체라는 분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 부산영화제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 시위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른바 한진중공업 5차 희망버스 시위대가 자신들의 시위를 가을소풍이라 부르면서 부산 바닷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12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덕수궁 앞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저지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제주 강정마을에 가서 해군기지 반대시위에 참여했던 바로 그런 집단들입니다. 전문 시위꾼들입니다. 이들 전문 시위꾼들은 전국을 유람하듯이 돌아다니면서 시위 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아야 하는 우리 국민들은 정말 답답합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시민단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특정 분야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안형환 의원 그러나 이 좌파 시민단체의 행태는 도를 넘어선 지가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대형 국책사업, 민간 기업의 노사분쟁 현장, 마치 쇼핑하듯이, 쇼핑 전문가가 쇼핑하듯이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새마을 간척사업,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용

산 철거민 농성 사태, 4대강 사업, 광우병 촛불시위,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마다 노골적인 프로의 시위꾼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단체들이 한진중공업 시위에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환경이 훼손되는 현장에 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이 마구 평택, 한진중공업, 이곳저곳 전문 분야와 관계없는 곳을 마구 휘젓고 다니는 것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단체들, 아무 관련이 없는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휘젓고 다니는 것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전문적 시위꾼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법률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부로서는 불법적인 사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 조치한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안형환 의원 본 의원은……

이들이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낳고 있습니다. 평화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갈등의 굵판, 방해의 굵판, 이제는 집어치워야 됩니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들의 행태 이대로 보고 둘 수만은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 공권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이 나라가 전문 시위꾼들의 쇼핑 시위의 장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총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은 국가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철저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안형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 쇠퇴, 금융위기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발 재정위기를 자

세히 들여다보면 정치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안일하게 이른바 포퓰리즘에 영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총리,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복지 포퓰리즘에서 빠져나오기란,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 속에 넣으면 금방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넣어 놓으면 뜨거운 줄을 모르고 죽습니다. 포퓰리즘이 바로 이렇습니다.

포퓰리즘은 사실 국민들을 위한다지만 국민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표를 위해서 돈으로 매수하는, 국민의 돈으로 매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총리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포퓰리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포퓰리즘이라고 딱 정의하기 보다는 국민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도 또 있고 하기 때문에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재정 여건에 맞는 적절한 우선순위와 범위를 정해서 복지가 시행되어야 된다 하는 원칙 하나하고, 또 이것이 방만하게 되면 결국은 후세대에 대한 부담을 안기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세대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현재 중심으로 해서 복지정책을 실현해 나가서는 안 된다, 정말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시행해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형환 의원 그리스의 경우는 아시지요, 그리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안형환 의원 작년에 그리스 정부가 복지 혜택을 위해서 1인당 1만 600유로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한 것은 1만 600유로인데 세금 수익은 1인당 8300유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2300유로가 적자였습니다.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EU 국가로부터 엄청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저축이나 투자, 인프라 확충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비에 썼습니다.

결국 그리스 5000억 달러라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고 오늘 이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총리께서는 그리스와 한국의 공통점과 차이점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먼저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리스의 경우에 복지정책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 가지고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구제 금융을 받아야 되고 모든 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지정책이 얼마나 신중하고 모든 것을 예견을 하면서 고려하면서 진행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교훈을 주는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안부장관 나오십시오.

○부의장 정의화 잠깐 결례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회의장 귀빈 방청석에는 박희태 의장님 소개로 요코미치 타카히로 일본 중의원의장님과 그 의장단 일행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요코미치 타카히로 중의원 의장님과 의장단 여러분들의 국회 참관과 대한민국국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하십시오.

○안형환 의원 무상 복지의 폐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케이스를 들려고 했는데 일본 방문단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께서, 돈에는 남의 돈, 우리 돈, 내 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예산을 남의 돈처럼 생각하고 마구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과시성·선심성 예산 집행을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호화 청사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런데 시군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읍면 단위에서까지 호화 청사를 짓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산시 탕정면의 사무소입니다. 직원이 16명인데 92억 원을 들여서 저렇게 호화관 청사를 지었습니다. 그 옆에는 126억짜리 탕정면에서 3km 떨어진 배방읍에 읍사무소를 건립 중입니다.

나는 우리 국가의 세금이 저렇게 왜 쓰여야 되

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 공립 박물관이 29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의 공립박물관 건립에 들어간 돈이 1조 1671억입니다.

장관께서는 박물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하루에 몇 명 정도의 관람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무리한 것들을 그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하게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못 하도록 철저하게 막도록 하겠습니다.

○안형환 의원 다시 한 번 화면을 보십시오.

지금 경북 청도군의 청도농기구박물관은 연간 방문객, 1년에 방문한 관람객이 200명입니다. 하루에 0.5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연천 향토사료관은 연간 방문객 수가 400명입니다. 하루에 1.1명이 방문하지 않습니다.

전국에 하루에 10명 이하 방문하는 박물관이 12군데, 하루에 100명 이하 방문하는 박물관이 115개, 전국의 290개 박물관 가운데서 40%가 하루에 100명 이하로 방문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마구 쓴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런 것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형환 의원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파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정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우선 조기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이것을 관리해 나가는 그러한 제도를 추진하고, 이밖에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안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원전 63년에 로마 공화정에서 집정관 선거에

출마했던 카틸리나는 평민들에게 부채를 모두 탕감해 주겠다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원로원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무모한 쿠데타를 시도하다가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포폴리즘의 역사는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농가부채 탕감 같은 공약이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일반 국민의 건강한 문제의식을 마취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포폴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폴리즘은 숨겨진 독선의 모습입니다. 포폴리즘이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포폴리즘의 단맛에 빠지면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전 세계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확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의화 안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英姬 議員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입니다.

사상 초유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가 경제와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 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의 주가와 환율은 방향을 잃어 갈팡질팡하고 있고 유례없는 고유가와 물가 폭등으로 시민경제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선거에만 쏠려 있습니다. 무분별한 복지 확대와 재정 팽창으로 위기를 부른 유럽 국가들을 보면서 여야 할 것 없이 누가 더 많은 선심정책을 내놓을까 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될 것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겠습니까?

최근 대통령께서 안철수 교수의 열풍과 관련해서 ‘우리 정치권에 올 것이 왔다, 스마트 시대가 왔다, 정치는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동감합니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박원순 후보가 제1야당의 후보를 제치고 야권의 단일후보로 선출된 것은 기존 정당이 민심과 신뢰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정당정치를 외면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정당정치 시스템이 국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평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丁英姬 議員 총리의 말씀도 맞지만 우선은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국민과의 소통부재 또 정치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에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 대신 갈등과 반목을 일삼고,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낸 우리 정치권 모두의 잘못입니다.

박근혜 전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지금 정치 전체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당정치의 개혁과 신뢰 회복을 위해 우리 정치권이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총리께서는 정부의 신뢰 회복과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총리 취임하면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소통과 화합입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현장을 찾아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각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현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은 물론이고 정치권과도 많은 소통하는 가운데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거기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등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화 부의장, 홍재형 부의장과 사회교대)

○丁英姬 議員 예, 지금 말씀하신 그것뿐만이 아니고 바로 소통이 절실한 또 다른 분야가 한미 FTA 비준안 처리입니다.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 작업이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이 달 중에 비준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丁英姬 議員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회 외통위원회에 비준안을 상정하는데만 4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丁英姬 議員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야당인 공화당과 수개월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냈습니다.

총리, 정부는 야당과 시민단체 또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FTA가 체결된 지 4년여가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정말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어민, 소상공인 등 FTA로 인한 피해를 받게 되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정책 요구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들과 협의를 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시키는 노력을 나름대로는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한번 정한 입장은 어느 쪽이든지 그냥 평행선으로 가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해결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도 남은 기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丁英姬 議員 그런데 요번에 한미 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여·야·정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논의가 있고요, 그리고 총리로서도 또 관련된 위원님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농식품 관련 위원들께서 총리실을 찾아 주셨고, 제가 어제는 또 여야 원내대표를 방문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대화도 나누고 했습니다.

○丁英姬 議員 예, 옳은 말씀이신데, 대화도 나누고…… 진정으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여야의 견해 차이를 줄여서 정치 실패

가 경제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절대 안 될 것입니다.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丁英姬 議員 다음은 재외 국민 투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재외국민 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처음 실시되는 투표이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보이는데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丁英姬 議員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투표소가 공관 중심으로 설치되다 보니까 투표하고 싶은 사람들이 실제로 투표하러 나오는 것, 그리고 그 전 단계로서 투표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丁英姬 議員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절차상 문제인데요,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등록과 투표를 위해서 두 차례 공관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희망연대 서청원 전 대표께서 얼마 전 워싱턴, LA 또 뉴욕 등을 방문해서 교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교민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런 뉴욕 같은 경우에는 각종 통행료가 아마 곳곳에 있는 것 같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면 영사관을 한번 방문하는 데 100불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불 들고 그다음에 진짜 투표하러 갈 때 또 100불 들고, 적은 돈이 아니지요?

더군다나 휴일도 아니고 또 선거도 아닌 등록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쓰면서 먼 거리를 다니게 된다는 것은, 재외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투표 등록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우편등록은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온라인의 경우는 보안상에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丁英姬 議員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있지만 입법취지에 맞게 보다 많은 재외국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 중앙선관위 등과 범부처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丁英姬 議員 등록금 문제, 최악의 청년실업과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빚더미에 짓눌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마트 냉장창고 수리를 하던 고 황순원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총리님, 이 사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압니다.

○丁英姬 議員 황 씨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지내면서 검정고시와 독학으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군에서 받은 월급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서 어머니를 드리고, 황 씨는 지난 5월 제대 이후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살인적인 대학 등록금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펼쳐 보기도 전에 좌절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반값등록금을 외쳤지요. 얼마나 외쳤습니까?

총리, 현재 해결된 것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우선 2012년에 1조 5000억 원의 국고 지원과 또 7500억 원 이상의 대학 자구노력을 통해서 등록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22% 이상의 등록금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丁英姬 議員 언제부터요?

○국무총리 김황식 12년부터요.

○丁英姬 議員 내년부터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丁英姬 議員 사실 이 반값등록금은 대통령 대선 때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더 등록금이 하루가 멀게 점점 더 이렇게 등록금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그런 등록금 인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지금 등록금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높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대학의 방만한 운영도 문제가 됩니다. 현 정부 들어서 대통령께서 반값등록금 공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딱 절반으로 싹둑 잘라서 절반이다 이런 취지는 아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소위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구축하고 든든학자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난 정부 이야기를 해서는 좀 적절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등록금 인상이……

○**丁英姬 議員** 아니, 적절치 않다는 말이, 제가 등록금, 현 정부에서 반값등록금 한다는 것이 대선에서 공약이었는데 그게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 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등록금이 딱 반값으로 한다는 취지보다도 부담을 최대한도로 줄이겠다 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丁英姬 議員** 알겠습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못 할 것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최대 민생현안인 등록금 인하 반드시 실천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어쨌든……

○**丁英姬 議員** 시간이 없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제 답변은 포함이 안 됩니다.

○**丁英姬 議員** 글썄, 그런 것은 아는데 할 게 많아서……

말씀하세요. 더 하실 것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丁英姬 議員** 지난 9·15 순환정전 사태는 블랙아웃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던 초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구제역 파동, 우면산 산사태, 대규모 정전사태 등 대형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정부의 대응 미숙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매뉴얼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수시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면밀히 점검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도록 보완해야 하는데 정부의 위기 대비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것은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미숙한 거나 노력이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회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절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러한 재난 대비에 대해서 각종 매뉴얼을 지금 수시로 점검을 하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떤 또 사고가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丁英姬 議員**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매뉴얼을 아무리 새 것을 갖다 놓고 좋은 것을 갖다 놔다고 해도 그 매뉴얼을 만질 줄도 모르고 다룰 줄도 모르고 또 수시로 거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치 않으면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丁英姬 議員** 그래서 총리께서는 현재 그러한 훈련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저희가 근자에 이루어진 정전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각종 TF를 구성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관련된 매뉴얼을 정비하고 할 것입니다.

또 그 부분뿐만 아니라 과거 연평도 사태 이후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또 여름의 폭우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말하자면 그런 점에 좀 허둥지둥하는 그런 대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丁英姬 議員**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 정부가 강조해 온 동반성장정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상생과 동반성장의 국제 어젠다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 또 함께 어울리는 사회라는 목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동반성장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우선은 민간 중심의 자율적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정책적으로……

○**丁英姬 議員** 아니, 기관이 어디냐고요?

○**국무총리 김황식** 이것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부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丁英姬 議員** 동반성장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딱 부러지게 말씀을 안 하시네요?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말씀드렸지요.

○**丁英姬 議員** 그래서 이 위원회의 강점과 한계

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우선 동반성장위원회는 강제성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제력이 없다 하는 점이 약점일 수 있으면 약점이고요. 그러나 그러한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자율적인 노력과 합의를 통해서 영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점에서는 그것이 또 강점이 될 수 있다……

○**丁英姬 議員** 말씀하신 대로 동반성장위원회의 조치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시각이 많고, 또 현 정권 임기가 끝나면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회의적 시각도 팽배합니다.

정부의 동반성장 어젠다가 구호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가입니다.

정부가 중점 관리하고 있는 52개 주요 생필품 즉 MB물가의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오히려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점 관리 품목마저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물가대책이 과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첫째는 소위 52개 생활필수품목에 대한 물가관리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관리하겠다는 취지지, 그것을 항상 다른 물가보다도 낮게 유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동안에 다른 물가하고 비교해보면 오히려 이쪽 물가상승률이 더 낮습니다.

○**丁英姬 議員** 낮다고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것보다도 이쪽이 높다 하는데 그 통계상의 차이가 나오는 것은 다른 물가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냥 산술적으로 평균한 것이고 저희가 더 낮다고 하는 것은 품목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해서 평가를 하면 11.6% 대 13.3%로 오히려 소위 MB물가가 더 낮습니다.

○**丁英姬 議員** 제가 지경위에 있으면서 이 문제를 계속 다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흰합니다. 총리님께서 조금 뭘 잘못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이 됐고 최근 서울시는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연 물가안정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정부는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물가라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들이 기초가 되고 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되도록이면 물가관리를 하되 자연스럽게 물가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은 반영하는 것이 전체적인 경제운용, 공기기업의 건실화 등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점이다 하는 정부의 고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英姬 議員** 지금 온 국민이 살기가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문제지만.

먹고사는 문제보다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지금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다음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도가니 사건요. ‘도가니’ 영화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저는 안 봤습니다. 본 사람들한테 자세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丁英姬 議員** 들으셨어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丁英姬 議員** 영화가 흥행하면서 재조사·특별감사 등을 촉구하는 여론이 빗발치자 해당 학교를 폐교기로 결정하고, 관련 교사 6명에 대해서 직위해제 중징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추가수사도 진행 중이고 정부의 최근 발 빠른 대응은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인화학교 사태가 최초로 발생한 것이 2005년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해서 관련 소설이 출간하고 영화가 나오기까지 6년 여 동안 걸렸는데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제 와서 당황해 가지고 이렇게 야단법석인데 정부는 6년이라는 동안—이런 일이 있었는데—무엇을 하셨는지 참 답답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2005년 당시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모든 재판절차는 일용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그게 문제가 되고 아직도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국민적인 분노를 자아내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丁英姬 議員** 그렇지요.

그런데 2005년에 시작된 것을 그때부터 다 알아서 준비는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광주교육청에서 또 법원에서 재판을 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던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선 그 해당 지방교육청과 그 지방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丁英姬 議員**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대해서도 사건 담당 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총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더구나 저항할 능력조차 없는 그런 장애인 대상 성범죄라면 더 엄정한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법률 문제입니다.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싶어도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하되면 그것은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와 같은 것도 전부 함께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丁英姬 議員**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검찰의 구형이나 법원의 판결은 국민들의 법감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총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대 보수주의의 시조로 불리는 철학자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는 ‘지키기 위해 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보수는 사회 모순이 갈등으로 변하지 않도록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진정한 보수입니다.

2011년 10월 대한민국은 정당정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와 보수세력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성찰과 회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여기에 당당히 회답하며 소통하는 정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혁에 앞장서는 정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정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북구 강서갑 출신의 존경하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식 의원**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북구 출신 박민식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지금 정치권을 가장 관통하고 있는 이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인데 우리 총리께서도 잠시나마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민식 의원** 총리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서울시장에 적절한 인물상은 어떤 것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간단하지요. 서울시정 또 서울시민을 위해서 정말 헌신·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가진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식 의원** 최근에 그러면 이 서울시장의 직책이 지나치게 좀 정치적으로 비화되는 것 같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어쨌든 서울시가 규모는 크지만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 하나니까 결국은 주민생활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서울을 아름답게 만들고, 시민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느냐 그런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조금 변질되는 감도 있어서 좀 온당치 않지 않느냐 생각도 해 봅니다.

○**박민식 의원** 오늘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아름다운재단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우리 총리께서 혹시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아름다운재단에는 기부한 적 없습니다.

○**박민식 의원** 화면을 좀 띄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아름다운재단의 2010년도 영역별 배분사업비를 보면 제일 처음에 ‘공익과 대안’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사업비 약 66억 중에서 19억, 가장 많은 부분이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아름다운재단에 후원할 때 그 돈이 어디로 쓰여진다고 기대를 하고 후원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가령 기부를 한다고 하면 아름다운재단이면 어려운 사람들에 도움을 주는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민식 의원 그렇습니다. 어려운 소외된 계층에 뭔가 도와주는 그런 것이라고 당연히 저도 생각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름다운재단에 몇 년 동안 소액이나마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재정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시민단체 그중에는 정치적인 단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체들에도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

단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평택평화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 그리고 저기 보면 공익단체활동가 교육과 재충전 지원 사업 또 환경활동가 자녀교육비 지원 사업…… 한 푼, 두 푼 소액을 아름다운재단에 후원하는 사람들이 그 활동가들의 개인적인 자녀교육비까지 지원되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기부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를 것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평범하게 생각하면 대개 소외계층, 빈곤층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박민식 의원 저런 시민단체에 이 후원금이 지원되리라는 것 이번 사건 나기 전에 혹시 총리는 알았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잘 몰랐습니다.

○박민식 의원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아름다운재단의 정관입니다. 정관이야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주무관청은 행안부고 비영리재단법인이 맞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민식 의원 최근에 여야 정파를 떠나서 민주당 또 민주노동당의 의원들도 박원순 후보의 기부금 모집에 대해서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다른 손에는 후원금을 받았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민식 의원 이것은 특정 정파의 문제 제기가 아닙니다.

행안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아까 재정보고서, 작년 것만 보면 작년 한 해에만 이 아름다운재단에서 226개 단체에 19억이나 되는 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돈을 지원했다면 이것은 특정 시민단체의 사실상 아름다운재단이 자금줄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실상 시민단체의 어떤 권력자로 군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무관청 장관으로서 감사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아름다운재단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킨다는 정관에 나와 있는 것을 아까 봤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정치적인 단체에 지원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재단이 시민단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그 자치단체, 시민단체에 불법성만 없다면 사실상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식 의원 지금 여당, 야당을 떠나서 이 모금액이 상당히 거액이고 또 그 모금 경위에 대해서 많은 의혹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사용처도 증거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재정보고서 한 장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것은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민식 의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한 푼, 두 푼 소액기부를 한 그런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장관께서 좀 무겁게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저도 빈민층,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들이 순수하게 쓰여질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은 면도 있구나 하는 점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식 의원 예, 들어가시고 총리께서 다시 한 번……

아까 영화 ‘도가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허탈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특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파렴치한 행위가 행해졌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차별, 응징이 가해지지 않았고 또 그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갖춰지지 않았고 또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또 현장에서 돌아가서 같은 직역에 종사를 하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들, 또 그런 것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교육청 차원에서 잘 챙겨지지 않았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섭섭해하는 것 같습니다.

○박민식 의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제대로 죄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석방되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나온 그런 결과기 때문에 제가 그 재판 양형 결과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지만 그러나 국민…… 물론 사실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영화나 소설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은 차이를 하더라도 그것을 잘 알 수 없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영화나 소설에 나타난 이런 관계를 가지고 비취볼 때 양형이 승복할 수 없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민식 의원 이번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습시다. 항소심에서 당사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석방된 것은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 자료는 아까 받아봤는데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민식 의원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은 모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실형도 있고 집행유예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식 의원 가장 주범이 집행유예로 석방됐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교장이 집행유예된 사람입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해 보려고 자료를 지금 구해 봤습니다.

○박민식 의원 그 주된 이유는 당사자와 합의했다는 겁니다.

자, 이때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당사자야 미성년자라 한다면 미성년자 본인과 또 대리할 수 있는 부모, 그런 쪽을 통틀어서 당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민식 의원 미성년자도 장애인이고, 놀라운

것은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도 이 사건에서 모두 정신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와 합의를 한단 말입니까? 항소심 법원은 합의에 의해서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와 합의를 한단 말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재판부에서 법에 따라서 일응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더라도 지금 말씀과 같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정들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박민식 의원 국무총리께서는 대법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또 이번 도가니 사건을 통해서 상임위원 또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면 정말 국민과 동떨어진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법관들이 법대로 판결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국민은 재판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확히 알든 모르든 얼마든지 비판할 자유가 있고 또 그럴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박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일단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이루어진 판결에 대해서 제가 국민과 같은 입장에서 그것을 가타부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원칙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국민순수한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사석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내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박민식 의원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석방이 되었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이 변호사가 호남지역에서 대학을 나오고 또 호남지역에서 오랜 법관 생활을 마치고 개업한 그야말로 전관 변호사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 받았다가 6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했는데 전관 변호사가 끼어 있었다. 일반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합의할 대상도 정신지체자, 부모도 정상인이 아닌데 여기에 국민들이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국민들은 얼마든지 그와 같은 평가, 판단하고 비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관예우로서 혜택을 받았고 또 합의할 대상도 좀 애매한

데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 잘못된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하면 그것은 국가 전체의 사법제도의 틀을 흠 가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신중하게 답변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박민식 의원 이해는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심에서 2심, 감형된 비율을 제가 봤습니다.

총리님 화면 한번 보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보입니다.

○박민식 의원 무려 70%, 성폭력 사범 1145명 피고인 중에서 2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비율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에서 항소심 가면 다 형을 깎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항소심이 형을 무조건 깎아 주는 감소심이 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게 법원에서 늘 문제 삼은 겁니다.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없으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법원에서 늘 강조하는 바인데 그러나 현실은 지금 모든, 지금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통계하고 비슷하게 말하자면 절반 이상이 감형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감형되는 경우라는 것은 아무래도 1심 때의 사정과 다른 사정들이 또 새로 생기거나 하는 것이 반영된 그런 결과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1심 판결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식 의원 이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자, 저도 법안을 제출해 놓았습니다만 왜 못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먼저 박 의원님, 법률가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공소시효 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나 이런 감정들이 많이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처벌을 안 해도 된다 이것은 지엽적인 것이고요.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재판을 하게 되면 그때는 너무 사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가릴 수 있는 증거들이 희미해지거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재판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재판을 하느니 너무 오래 된 것에 대해서는

문지 않기로 하자 이런 제도가 공소시효 제도입니다.

지금 사형도 공소시효가 있고 우리 형법에는 모든 범죄가 다 공소시효가 있는데, 물론 천인공노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해 가지고 공소시효가 갖는 원래적인 의미 그것을 물리치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회적인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식 의원 아니, 공소시효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물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학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형벌 분야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그런 입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다른 형과의 균형이라든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해 가지고, 물론 공소시효를 없앨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관련된 다른 제도하고 잘 이렇게 신중하게 논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민식 의원 아무튼 일본에서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2000년에 폐지했고 또 영국이나 미국의 많은 주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추세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변화된 그런 외국의 입법례라든지 하는 것도 참고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민식 의원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주 총리실에서 장애인 아동 성폭력 방치 대책을 발표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민식 의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여기 있습니다.

○박민식 의원 지금 우리 정부 들어와서 성범죄 관련 대책 몇 번이나 발표하신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식 의원 표를 보시면 2008년·2009년·2010년 연례행사처럼 발표하는데 재탕 삼탕입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조치들이 계속해서 되어 왔습니다.

○**박민식 의원** 어떻게 사건이 생길 때마다 즉흥적으로 이런 재탕 삼탕 하는 대책, 국민들 안 믿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의 정말 절박한 심정을 우리 정부에서 보듬어 안아야 됩니다.

어떻게 특단의 대책 마련하실 용의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총리실에서 최근에 발표한 이런 대책들이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련해서 더 추가할 그런 대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민,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식 의원** 최근에 신탁 또 새마을금고 사건 관련해서 김석동 금융위원장 발언 문제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보고받았습니다.

○**박민식 의원** 지금 여러 번 비슷한 언행으로 혼란을 초래했는데 해임 건의하실 용의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신탁, 새마을금고가 당장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런 것보다는 저축은행 사태가 일단 마무리됐으니까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 아마 회의에서 논의가 된 것이 외부적으로 발표되는 과정에서는 마치 신탁이나 새마을금고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잘못 전달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정의화 부의장님께서도 저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새마을금고에서 많은 예금을 인출을 해 갔는데 새마을금고는 전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른 저축은행이나 다른 금융권에 비해서 연체율도 훨씬 낮고, 또 일부 방송에서는 '이것은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일종의 뱅크런(bank run)이 일어났는데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예금 보장이 되지는 않지만 또 자체 보험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그것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보호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아시고 그 점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거나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PF 대출에 그와 같은 문제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좀 알려지면서 오늘부터는 인출이 많이 잦아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민식 의원** 서민들, 특히 지방의 서민들의 주거환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부동산정책,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의식주의 근간인 주거가 쾌적하게 또 여하튼 전·월세가 되었던 소유가 되었던 간에 안정적으로 주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기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민식 의원** 쉽게 말해서 서민들이 싼 값에 좋은 주택을 구입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민식 의원** 총리님, 서민들한테는 집이라는 것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달리 자기 인생 전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동의합니다.

○**박민식 의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민식 의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시다시피 지금 재개발사업이 있고요, 또 어떤 지역 단위로 해서 환경을 개선을 하는, 그래서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민식 의원**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또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민식 의원** 그런데 지방에 있는 많은 서민들은 LH공사가 수도권 보급자리 주택사업에 쉽게 말해서 올인 해 가지고 지방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상당히 소극적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시다시피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LH가 관여하게 되는데 채무의 과중, 재무건전성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거나 또는 뒤로 미루는 그런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지역의 사업이 차질을 빚고 그에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박민식 의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10년을 끝다가 보상이 딱 이루어진 찰나입니다.

총리님, 그런데 서민들은 그동안에 정부를 믿고 좀 더 좋은 자기 집 갖기 위해서 비가 새고 마룻바닥이 내려앉아도 수리도 안 하고 10년 기다렸습니다. 그런 고통 이해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해합니다.

○박민식 의원 그런데 예컨대 2008년도에 보상을 하겠다 공고까지 다 하고 통지서까지 다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년 반 지나서 이제 다시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아파트 값이 2배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보상금 받고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취지가 됩니까? 그 주민들이 갔다가 환경개선사업이 종료되면 다시 입주하는 것이 취지 아니겠습니까? 계획대로 보상을 안 해 놓으니까 그 사이에 집값이 2배로 뛰어서 오도 가도 못 하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그와 같은 일이 생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LH 경영 악화, 부동산 경기 위축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었지만 또 보상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지만 그 보상이 변화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너무 적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LH공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보상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보상, 아까 하남의 경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상을 하는 쪽하고 받는 쪽의 사이에서 말하자면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적 절차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박민식 의원 주민들은 아무 죄가 없는 겁니다. 그냥 LH공사 내부의 사정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어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런 사진은 우리나라 곳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현수막 들고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다, 집 문제 때문에……

정말 우리 사회의 큰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계속 그냥 뒷짐 지고 가만히 계실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정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데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LH 측에 어떤 부당하거나 불법한 행위가 있었으면 그에 대해서는 또 LH에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LH가 방침을 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전향적으로 해결하고 그것이 법 원리에 어긋나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은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박민식 의원 아무튼 주거환경개선 사업 그 취지를 정말 생각해서 서민들이 안락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최근의 정전사태 또 유사석유 주유소 폭발사건, 또 아까 말한 도가니 사건 이런 것을 겪으면서 혹시 공통점 내지는 교훈 같은 것을 느끼신 적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가 많은 부분에서 조금 허술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다 하는 측면입니다. 정말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이 없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그냥 방만하게 방치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든 사람 각자가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제대로 챙겨서 제대로 하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위기관리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대응 매뉴얼을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그리고 매뉴얼을 또 숙지를 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정전사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계 TF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식 의원 아니, TF 만들고 또 매뉴얼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훈은

지금 책임기관 간의 소통 부족입니다. 무사안일입니다. 정전사태 보십시오. 지식경제부,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그 쓰나미가 오는데 뭘 했습니까? 다 따로국밥처럼 놀았습니다. 주유소 폭발, 소방방재청 또 석유관리원 또 수사기관 다 따로국밥처럼 놀은 겁니다. 뭔가 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만들 생각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당연히 그런 노력들을 하지요. 이번 정전사태만 해도 전력 공급 측면, 수요 예측 측면이 잘못된 것도 바로잡아야 되고 또 관련된 기관끼리의 정확한 정보 공유 및 이것에 대한 처리 절차 이런 것들이 미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전부 포함해서, 또 재난방송 체제하고의 연결 문제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전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유사 석유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국무회의에서도 지적을 하고 당부를 했습니다마는 십수 년 전부터, 제가 재관하면서부터 유사석유 문제는 계속해서 다루어왔던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의미로는 더 규모가 커지고 있는 그래서 폭발사고까지 일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원인 같은 것을 좀 챙겨 봤더니 말하자면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지능화되어 가지고 보통의 의지·노력을 가지고는 챙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대응을 해서 보다 철저하게 가려낼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고 오늘도 지시를 해서 그 작업을 또 시작을 합니다.

○**박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에 스티브 잡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또 그가 남긴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그저 고집불통의 완벽주의자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지금 우리는 그를 추모하며 본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했고 결국 전 세계 어느 정치인이나 지도자도 이루어내지 못한 변화를 그리고 혁신을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혁신의 노력과 건전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오로지 권력 잡기에만 급급합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바꾸자고만

외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바꾸는 것이 능사입니까? 묻지마 개혁이 필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는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나가야 할 인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의 땀과 정성이 모여 시나브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국가가 위기이고 세상이 어지럽다고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꼴 배던 낮까지 들고 정치관으로 나가 버린다면 과연 ‘소는 누가 키우나’ 걱정일 따름입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박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용인 기흥 출신의 존경하는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俊宣 議員** 용인시 기흥구 출신의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입니다.

집권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현 정권은 집권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정치권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 하나 우리 국민을 웃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니, 웃게 하기는커녕 고통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일상을 팍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하고 총리는 무엇을 하고 과반수 여당인 우리 한나라당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1 야당인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국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쟁으로 초토화된 황무지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민족이고 세계 최빈국에서 50여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룩하여 세계 10대 강국을 만든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하고 현명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위기 상황과 원인을 정확히 성실하게 알려야 하며 국민들의 의사를 경청하고 국민의 의사를 겸허하게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는 물론 총리·장관을 비롯한 임명직 공무원들도 늘 국민들의 마음을 살피서 그것을 공직 수행의 최고의 화두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

못한 모든 공직자들은 국민과 열심히 소통하고 또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 국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화면은 저희 지역구 주민들이며 또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입니다. 음향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본 의원이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20대 대학생입니다.

대학등록금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취업 걱정에 미래가 암울하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와 취업난 문제를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0대 음식점을 자영하고 있는 원종순 씨입니다.

재료비 등의 과도한 상승으로 앞으로 벌고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의 쓰라린 마음을 정부에서 헤아려 줄 것을 부탁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정부의 지원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대 주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당시 경제 대통령으로서 기대가 컸으나 현실은 심각한 물가상승분에 비해 임금상승이 낮아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물가를 잡아주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대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구매력이 있는 수요자들은 부동산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주택을 구매하지 않고 있으며 또 다른 수요자들은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여파로 전·월세가 급등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소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비 감소로 인해 연쇄적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즉각적으로 부동산 관련 모든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대 주부입니다.

예전에는 1만 원 단위로도 충분히 장을 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10만 원을 들고 나가도 물가가 높아서 장을 보기 어렵습니다. 비싼 등록금을 들

여서 자식들을 대학졸업까지 시켰는데 취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딸들이 마땅한 직장을 잡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

다음은 60대 김성덕 씨입니다.

주택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자신을 포함한 중산층이 몰락할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거래에 관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70대 송인우 씨입니다.

6·25 전쟁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만큼 잘살게 된 것은 국민들이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한 위대한 결과인데 요새 일부 세력들이 시위 등을 통해서 국민 분열을 선동하고 있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협력하고 단결해서 한미 FTA를 연내에 통과시켜 주고, 휴대폰 기본료도 인하시켜서 서민이 잘살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리께, 화면 잘 보셨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朴俊宣 議員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우리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다 망라적으로 말씀해 주셨다,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朴俊宣 議員 본 의원이 2년 전에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면 광주, 강원도 지역별로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그다음에 직업별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라, 그것을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는 FGI(focus group interview)라고 합니다. 수시로 해서 대통령께 전달해라,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정부로서도 국민의 여론, 민심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은 나름대로 파악해서 날마다 챙기고 있습니다.

○朴俊宣 議員 좀 더 정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소개해 주신 저런 분들의 목소리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朴俊宣 議員 그런데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되

지 않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도 있고 또 서로 간에 어긋나는 문제도 있고 하지만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국민들 눈에는 좀 미흡하게 비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朴俊宣 議員** 우리가 집권 초반기에 광우병 촛불사태 겪었습니다, 위기를.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했고, G20 정상회의도 개최했고, 국민의 염원이던 평창동계올림픽도 유치했습니다. 잘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아직도 뭔가를 부족하게 느낍니다. 과연 우리 민심은 현 정부를 잘한다고 할까요, 못 한다고 할까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가 있지만 말하자면 그런 좋은 성과보다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쉽고 좀 부족한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당연하게 그런 부분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朴俊宣 議員** 저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하지만 국회의원을 하면서 잘한 일보다는 못한 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이고 더 잘하라고, 우리 국민들은 끊임없이 요구할 권리가 있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은 끊임없이 그 요구를 채워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3년만에 또 위기가 닥치지 않았습니까? 3년 전에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때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고, 공직자, 여야 간에 일사불란한 어떤 단결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만에 또다시 국제경제위기, 내수경제의 부진, 침체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마치 수렁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수렁에서 헤쳐 나올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우리가 3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당·정·청, 여야 할 것 없이 혼연일체의 결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맞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맞습니다.

○**朴俊宣 議員** 위기를 극복하고 혼연일체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국민, 여당과 야당이 정치적인 이해당사자 모두가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맞습니다.

○**朴俊宣 議員**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민의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朴俊宣 議員** 현재의 대통령실장,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의 참모진들 과연 잘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소통이라든지 또는 민심의 정확한 파악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하시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는 국민들이 어느 점을 아쉬워하고 민심이 어떻다 하는 것은 정확히 파악을 하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내용을 아시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은 자신 있게 드리구요.

○**朴俊宣 議員** 소통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임기제 대통령, 임기제 국회의원은 처음에 임기를 시작하고 임기 중에는 계속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朴俊宣 議員** 그리고 그것은 절차와 형식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철수 돌풍,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치권에 올 것이 왔다’는 말씀을 하심으로 해서 여론에서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 아닌 정치권에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진정으로 그러했다면, 잘못된 상황인식을 하고 있다면 대통령실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여야 정치권이나 현 정부나 우리 기성 공조직이나 정치권 모두를 통틀어서 하시는 말씀이지 대통령 당신은 책임이 없고 밖에서 다른 사람, 다른 정치권에서 책임이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朴俊宣 議員**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표현이 잘못되고 오도가 댔다 하더라도 언론과의 중요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뜻이 그렇게 왜곡돼서 나간다는 것 그 자체

도 대통령실장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어제오늘 대통령 퇴임 후 사저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에서 비롯된 야당의 공격에서 문제된 것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도 역시 대통령 핵심 참모들이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뜻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과 정치적 위기 상황의 타개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직언할 수 있는 강단 있는 인물로 대통령의 핵심 참모진을 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또한 총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방송을 통해서 또는 총리께서 대통령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창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된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朴俊宣 議員 그렇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본인이 가까스로 재선에 성공했으면 시민들이 선택한 70% 넘는 민주당 시의원들도 존중했어야 됩니다. 상호 토론하고 상호 양보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대립각 세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와 가장 극명하게 대립되는 반대의 사례가 김문수 도지사입니다. 총리님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朴俊宣 議員 이 오세훈 전 시장, 우리 한나라당 출신이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서울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통령, 총리께서도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상호 타협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안철수 신드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다른 의원님 질문에서도 답변을 했지만 여야 정치권이나 기성의 체제가 대

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좋은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朴俊宣 議員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을 포함해서 정치권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앞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눈앞에 더 커다란 걱정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전혀 검증되지도 않고 도덕성에도 의문이 많은 박원순 후보자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박원순이라는 그럴싸한 후보를 등에 태운 진보연대·참여연대를 비롯한 다수의 좌파세력입니다. 그들이 서울시정을 장악해서 좌파정책의 실험실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로 걱정입니다.

총리께서도 걱정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정치 상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俊宣 議員 과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박원순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간 들판처럼 서울시의 살림은 거덜 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민들이 떨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는 멀리서 보면 해롭지도 않고 심지어는 아름다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포식성과 가혹성은 농부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총리도 그렇고 정치를 하는 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려서 서울시정과 국민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총리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고맙습니다.

○朴俊宣 議員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경제가 내수 경제의 50%다’라는 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朴俊宣 議員 DTI 규제, 다가구 양도세 증과,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대표되는 주택거래 규제정책, 헌법상의 이념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아닙니다.

○朴俊宣 議員 정책에 불과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朴俊宣 議員 과거에 부동산시장이 하도 과열

되고 뜨거워서 일종의 얼음주머니를 갖다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내수경기,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악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습니다. 너무 얼어붙었으면 그 얼음주머니를 떼야 되니까, 아니면 계속 붙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그때그때 변화해야 되는데 지금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朴俊宣 議員 총리께서 제대로 인식을 갖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DTI 규제 등 부동산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리실 산하에 TF팀을 만들어서 국토해양부, 금감위, 재정부 그 이견을 조율해서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주택거래 활성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간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든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한다든지 또 각종의 사업 승인 대상을 완화한다든지 중소형주택 저리 건설자금 지원한다든지 미분양주택을 전·월세로 공급할 때 취득세나 양도세를 감면한다든지 각종의 이러한 정책을 나름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결국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또 그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朴俊宣 議員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조화되는 선에서 정책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국토해양부와 더불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俊宣 議員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토착화, 너무 깊어지지 않게, 너무 늦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朴俊宣 議員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물가가 통신비와 기름값입니다. 통신사, 정유사가 4개, 3개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우롱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부는 계속 시장구조를 뜯어고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체감물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독과점체제를 과감하게 허물고 실질적인 경쟁체제가 되어야 소비에

대한 착취 양태가 개선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정부도 기본적으로 가령 통신의 경우에 통신시장에 경쟁을 적극적으로 촉진시키는 이러한 대책들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재판매 사업자 진입을 촉구해서 통신시장을 경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밖에 스마트폰 요금이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 정책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유소 기름값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알뜰주요소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손에 쥐는 그런 결과를 지금 당장 보여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朴俊宣 議員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朴俊宣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이명박 정부 임기 1년 4개월, 18대 국회는 7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국가경제는 위기 상황이며 국민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무기력합니다. 하지만 힘 빠진 채로 남은 임기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현재의 국정 상황과 민심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기용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과 국무위원들이 가장 최선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보다 유능하고, 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보다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차분히 돌아보실 것을 감히 권유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번 18대 국회 임기가 우리 공직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양보하고 협상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박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 전주 완산을 출신의 존경하는

민주당 장세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장세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홍재형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전주 완산읍의 장세환입니다.

지난번 대선 때 이명박 후보가 많은 전과 기록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경제만은 살리겠지’라는 국민적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4년차인 지금 경제정책은 실패로 끝났고, 국민들의 기대는 분노와 절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비단 경제정책뿐만이 아닙니다. 대북정책, 외교정책, 지방정책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첫째, 이명박 정부가 살린 경제는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경제였습니다. 서민경제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전국 전세가격 평균 상승률이 14%, 서울의 전세값 상승률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물가상승률은 19.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10.7%의 2배, 가계부채는 2010년 말 현재 937조 3000억, 그야말로 전·월세 대란, 물가 대란, 가계부채 대란, 이런 대란으로 서민은 생계를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업자가 425만 명이고, SSM 등으로 해 가지고 지난 3년간 자영업자 45만 7000명이 문을 닫았습니다. 통계청과 OECD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노인자살률도 10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 또한 7.5%로 OECD 평균 21.2%의 3.1%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복지예산 증가율은 2009년 13.5%에서 2012년 6.4%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의무지출 증가분 등을 빼고 나면 실질적인 복지예산은 0.41% 증가에 그치고 맙니다.

반면 대기업은 불황 속에서도 매출과 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계열사 수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총자산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3년 동안 59% 늘었고, 현대차는 71.2%가 늘었습니다. 10대 재벌기업들의 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북정책의 실패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전략도, 의지도, 비전도 없는 대북정책으로 민주정부 10년이 어렵게 쌓아 놓았던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간 협력 분위기는 일순간에 한반도 위기 심화라는 신 냉전 시대로 되돌려

졌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결합시키는 일만이 남북한 경제발전의 지름길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셋째, 외교정책의 실패를 지적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외교정책은 한마디로 무대응·무전략 외교정책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 아래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한미 관계를 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해 표기에 있어서 미국은 일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중국이 우리의 고구려역사를 중국역사로 변화시켜 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외교적 대응,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정책의 실패는……

어제 총리께서 대신 읽은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수사에 불과합니다. 이명박 정부에 있어 적어도 지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권 집권 3년 동안 지방채무는 49.9%가 늘었습니다. 참여정부의 5년 간 지방채무 증가율이 평균 1.3%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때 폭등 수준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LH 분산배치 같은 대국민 약속을 파기했고, 잦은 말 바꾸기로 국론은 분열되었습니다. 또 지역 간 갈등, 극에 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살인적인 고물가와 전세대란 그리고 높아만 가는 실업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통과 독선의 정치로 민주주의와 인권은 실종되고, 지방정치의 실종으로 지역 간 양극화와 갈등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결적인 남북 관계로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고, 복지예산의 후퇴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국민 고통의 시대, 국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망성을 촉구하면서 총리께 질의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안녕하세요.

○장세환 의원 총리, 하루 종일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장세환 의원 전에도 한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다마는 취임 때부터 총리께서 잘해 보겠다는 그런 진정성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부디 정권의 총리가 아닌 대한민국의 총리로 기억되는 그런 총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장세환 의원 이명박 정권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32명이 각종 비리로 구속되었거나 수사받고 있는 것을,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한 것입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마는 대통령께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 이렇게 말씀은 하신 바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자꾸 생겨서 안타깝다’ 하는 말을 청와대 참모들에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선거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정치금 등을 받거나 그런 적이 없어서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권으로 출발을 했고 그러한 상태로 유지되기를 바랐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장세환 의원 그래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은 아니다, 그 말씀이시네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측근 비리가 이렇게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응당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세환 의원 그런 문제라면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뭐 수사기관에서 엄정히 조사되고 처리되고 하는 것이 우선……

○장세환 의원 그런 결과가 나오면 검토를 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총리가 또 국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는……

○장세환 의원 그렇게 양해는 안 되고요,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를 합니다.

SLS그룹 이국철 회장이 2009년 당시 현직 검사장 두 명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어제 확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언론에서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세환 의원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이 두 명의 검사장이 차동민 전 대검차장 또 정진영 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장세환 의원 그런 보고 전혀 받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장세환 의원 잠깐만 들어가시고, 그러면 법무부장관 잠깐 나오십시오.

법무부장관께서는 보고받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 수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현재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세환 의원 보고는 받으셨는데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말씀, 수사 결과를 발표……

○장세환 의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장관이나 총리에게는 실시간 보고돼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수사의 전반적인 상황은 보고됩니다. 다마는 보고되는 사항을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그때그때 발표하는 것은 피의사실공포 같은 문제도 있고 수사에 법무부장관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염려도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언급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세환 의원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미루어 봐서는 이 두 명이 역시 틀림없는 것으로, 제가 받은 정보와 장관께서 알고 있는 정보가 일치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장세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총리!

○국무총리 김황식 예.

○장세환 의원 야당이 알고 있는 정보를 대한민국 총리가 모르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이게 정상적인 정부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게 오히려 정상적이지요. 수사기관 검찰에서, 독립된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을 총리가 그런 내용을 살살이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 한다면 몰라도 그러한……

○장세환 의원 무책임 총리나 무책임 정권이라면 총리 말씀처럼 정상적이겠지요.

그러나 책임을 지는 정권, 책임지는 총리라고 한다면 이처럼 중요한 사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실시간 보고를 받으셔야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사건은, 특히 검사도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정확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총리가 거리를 두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책임 있는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결시시콜콜 챙겨 가면서, 그렇게 되면 항상 저로서도 말하자면 다른 욕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야 됩니다.

○장세환 의원 총리의 수사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부도덕한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삼성의 새만금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삼성은 그동안 전북에 한 번도 투자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이 투자는 10년 후인 2021년도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거기다가 개인 기업의 투자계획을 정부가 주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발표 시점이 LH 공사 경남 일괄 이전설이 퍼져 있던 때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서 이 발표가 참으로 수상쩍었습니다.

그러나 전북 도민들은 전북 발전에 중요한 연관이 있다는 점 때문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양해각서를, 정부와 삼성·전북도 간의 3자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를 비공개로 해 왔는데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양해각서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양해각서로 확인을 한 결과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PPT를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일단 저 큰 것이고요, 다시 좀 자세한 걸로……

저기를 보면요, ‘삼성그룹은 새만금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실이 같은 날 작성한 보도자료는 ‘삼성그룹 새만금에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 구축’이라는 제목 아래 투자계획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총리실이 조작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지금 처음으로 제시하는 문건 비교해서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마치 전복을 달래기 위해서 참 그러한 뜻도 없는 삼성을 끌어들이고 가고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이렇게 들리는데요, 삼성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기업도 아니거니와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할 정부도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라북도 지사가 깊이 관여되고 노력을 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총리로서도 이와 같은 삼성의 의사하고 전라북도하고 또 총리실 실무자들하고 그런 접촉이, 이러한 노력이 진행된다는 것을 듣고 정말 혼쾌한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였지 총리실에서 그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조작했다거나 과장을 했다거나 그런 점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환 의원 믿고 싶은데요, 사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아닙니다.

○장세환 의원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그렇게 무책임한 기업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각서에다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투자 성사 노력을 밝힌 것인데 왜 총리실은 투자계획으로 조작을 하느냐,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딱 그 점입니다. 다른 건 전부 아닙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건 제가 실무자한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그때 삼성 관계자하고 제가 만나 가지고 정말 삼성의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들은 바로는 굉장한, 나름대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역시 삼성은 상당히 긴 장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고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장세환 의원 좋습니다.

제가 삼성에 이것을 확인을 하는데 삼성은 투자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양해각서대로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0월 6일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도, 삼성 공식적인 반응을 다시 묻는데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계획이 없기 때문이지요.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자칫하면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이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으려면 삼성그룹이 이 문제에 관해서 입장을 솔직히 밝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 주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도자료 작성 경위라든지 또 삼성 측의 지금 현재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삼성 측과 한번 접촉을 해서 알아보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지금 당장 어떤 세부적인 투자계획을 확정을 해서 공개하는 것이 어려움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장세환 의원 물론 10년 뒤의 일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묻는 것은, 다시 묻습니다마는 투자 성사 노력을 투자계획으로 둔갑시킨 것, 조작시킨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삼성 측과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계속 협력해서 당초 MOU 내용대로 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하여튼 챙기겠습니다.

○장세환 의원 이것 말고도 지금 LH 후속대책도 없고, 또 LH 분산 유치가 무산이 됐었고 거기다 후속대책도 없고, 더군다나 내년도 전라북도 예산이 1.1% 증가입니다, 정부 예산은 5.5% 증가하는데.

이런 식으로 전북 무시 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북 도민들 극도의 분노와 좌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어떤 근거로 1.1%가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세환 의원 작년 예산에 비해서……

○국무총리 김황식 절대 전북도를 홀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새만금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금년보다도 16% 증가된 예산을 배정을 한 것이라든지 또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는 여하튼 저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장세환 의원 그렇게만 해 주시면 정말 고맙는데요, 지금 정부 발표대로라면 2020년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를 한다는 계획 아래 7조 400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매년 8425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내년 정부 예산으로 배정된 것은 3905억, 절반도 안 됩니다.

이대로 하면 2030년 가도 완공이 안 되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개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20조가 좀 넘는데요, 그중에서 절반은 민간투자이고 절반은 재정이 투입되는데 사업의 성격상 초기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예산 투입이 적습니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여하튼 재정이 투입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만금사업추진위원회하고 관련해 가지고 총리하고 강현욱 장관님하고 공동위원장이십니다.

전라북도에서 많은 경륜을 가지시고 덕망 받는 그 어른이 새만금 개발에 관해서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정부가 그것을 함부로 하거나 하는 것은 그 어른이 당장……

○장세환 의원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 더욱 더,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장세환 의원 셋째, 부도덕한 사례로 이명박 대통령 사저 구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5900만 원, 오늘 오전에도 죽 질의가 있었

습니다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건립을 두고 ‘아방궁’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48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는 ‘수퍼 아방궁’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가격 차이라는 것이 김해지역하고 그야말로 서울의 땅값이 비싼 그런 지역하고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지 대지의 크기라든지 건물 모양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세환 의원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수도권에 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 이시형 씨를 개입을 시켜 가지고 땅 구입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땅세탁했다, 들어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 일부 언론의 만평에 나온 것입니다. 세탁은 돈세탁만 있는 게 아니라 땅세탁도 있다는 것을 꼬집은 것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 명의를 처음부터 내세워서 취득하는 경우에 지가문제라든지 그리고 경호사저를, 경호나 경호시설을 건설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안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 부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들 명의로 사고 그다음에 그 노출단계에서는 대통령 명의로 하고……

○장세환 의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아마 국민들이 정확히 사안이나 그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시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세환 의원 진짜 중요한 문제는요, 이시형 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은 11억 2000만 원으로 공시지가보다도 조금 싼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매입한 아홉 필지 토지 648평은 42억 8000만 원으로 공시지가 10억 9385만 원보다 3배 가까이 더 주고 산 것입니다.

이것을 말입니다. 이시형 씨가 사는 것은 내 돈이고 대통령실에서 사는 땅은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내 돈은 적게 들고 국가예산은 마구 쓴다 그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시형 씨가 매입한 토지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 소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장세환 의원 그 땅이 이렇게 싸게 사들여졌으면, 그쪽 부동산 전문가들은 110억대 간다고 합니다. 벌써 100억대 정도의 시세차익을 보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되는 것이고 부동산 투자를 국가예산으로 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시형 씨가 매입한 토지를 싸게 하는 조건으로 대통령실이 매입한 땅을 비싸게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건 어제 대통령실에서 또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가격 자체가 지가가, 땅값이 경호사저, 경호시설 부분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뭐……

○장세환 의원 똑같은 땅주인이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들입니다.

그 부분……

오늘 한나라당 의원들 대부분들이 우리 박원순 시장 후보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급하기로서니 역사 왜곡과 함께 일제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시킬 수 있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2010년 3월 22일 제정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938년 4월 1일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이 강제 징용됐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시고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장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장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출석 의원(27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진
변재일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경재	이균현	이낙연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상민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李玲愛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개의 시 재석 의원(107인)

강명순	강석호	강성종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권선택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소남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장수	김재균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창수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남경필	문희상
박근혜	박대해	박보환	박상은
박선영	박은수	박주선	박준선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재현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심대평
안경률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재중	윤상일	윤영	이균현
이명수	이명규	이명수	이사철

이 상 민 이 성 남 이 성 현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인 제 이 재 선 이 정 현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춘 식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화 수 이 회 창 임 동 규 임 영 호
 장 병 완 전 현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해 결 조 순 형 조 정 식 주 승 용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규 성 최 병 국
 최 연 희 한 기 호 허 천 홍 정 육
 황 진 하 황 영 철 황 우 여

○속개 시 재석 의원(72인)

강 기 정 강 명 순 권 경 석 권 성 동
 고 흥 길 김 낙 성 김 선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소 남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정 권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형 오 김 회 철 노 철 래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우 순 배 영 식
 배 은 희 변 응 전 서 종 표 성 윤 환
 송 광 호 신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심 재 철 안 규 백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목 유 성 엽
 유 원 일 유 일 호 윤 상 일 윤 상 현
 이 명 규 이 범 관 이 상 권 이 성 남
 이 성 현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은 재
 이 종 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화 수
 정 갑 윤 정 수 성 정 옥 임 정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해 결
 장 윤 석 조 승 수 차 명 진 최 연 희
 허 원 제 허 천 홍 사 덕 홍 일 표

○산회 시 재석 의원(62인)

강 명 순 강 봉 균 김 성 조 김 소 남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회 철 노 영 민 박 보 환
 박 선 영 박 은 수 박 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재 현 류 근 찬 서 종 표
 송 훈 석 신 건 신 영 수 안 효 대
 양 승 조 원 희 목 유 성 엽 유 정 현
 윤 상 일 이 명 규 이 상 득 이 영 애
 이 은 재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결
 이 종 혁 이 화 수 전 재 희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진 섭 정 해 결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전 혁 조 정 식 주 승 용 최 규 성

허 천 허 태 열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황 우 여

○출장 의원(2인)

신 학 용 조 진 형

○청가 의원(5인)

서 병 수 안 민 석 정 양 석 정 하 균
 홍 희 덕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권 오 을
 입 법 차 장 김 성 곤
 의 사 국 장 한 공 식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김 황 식
 통 일 부 장 관 류 우 익
 법 무 부 장 관 권 재 진
 행 정 안 전 부 장 관 맹 형 규

○출석 정부위원

행 정 안 전 부 제 2 차 관 이 삼 결

【보고사항】

○의원 당적 변경

의원명	선거구	변경 전	변경 후	연월일
심대평	충남 공주·연기	국민중심 연합	자유선진당	2011. 10. 10
이인제	충남 논산·계룡· 금산	무소속		
조승수	울산 북	진보신당	무소속	

○의안 제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0 김태원·김소남·서병수·임동규·
 이군현·진영·김충조·고흥길·장세환·
 문학진·조승수·윤상일·이윤석 의원 발의)
 10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0 홍일표·이한성·이찬열·차명진·
 장윤석·김희철·정희수·최규성·유선호·
 신영수·김기현·이학재·윤상현·박상은·
 이경재·신성범·이윤성·조전혁·이상권·
 조진형·신학용 의원 발의)
 10월 11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10. 10 정부 제출)

10월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0 이애주·윤석용·유승민·이윤성·
임해규·유재중·정옥임·김혜성·이정선·
김성동 의원 발의)

10월 11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의안 심사**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 발의)**

(2010. 4. 27 서병수·유기준·김학송·이명수·
김태원·유성엽·박민식·정희수·권영진·
오제세·이한성·박대해·황우여·안홍준·
한선교·이성현 의원 발의)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 발의)

(2009. 9. 10 곽정숙·강기갑·권영길·박은수·
양승조·유성엽·유원일·이한성·이정희·
홍희덕 의원 발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 발의)

(2009. 11. 17 이종혁·이한성·고승덕·한선교·
안홍준·김옥이·박민식·공성진·서상기·
임동규·허태열·김영선·정양석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2009. 9. 10 곽정숙·강기갑·권영길·이정희·
홍희덕·박은수·양승조·유성엽·유원일·
이한성 의원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0. 8. 27 이명수·이진삼·홍희덕·임영호·
김영선·유성엽·이해봉·김을동·김용구·
박선영·김효재·오제세·김창수·이은재·
권선택·이상민·김춘진·송훈석 의원 발의)

(이상 5건 폐기하기로 의결)

이상 5건 기획재정위원장 보고

○계획서 제출**2011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계획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

(2011. 10. 10 정부 제출)

소관 상임위원회(정무·정보 제외)에 회부

○서면질문서 제출**세종시 재정수요 관련 질문서(2건)****소사-원시 복선전철 토지보상비 확보관련 질문서(2건)**

(이상 4건 2011. 10. 10 백원우 의원 제출)